第215回國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定期會)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0年11月27日(月)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부소관
2. 2001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보고
   가. 환경부소관

審査된案件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부소관 ····· 1
2. 2001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보고
   가. 환경부소관 ····· 1

(10시49분 개의)

○委員長 劉容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국회 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成碩鎬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입법조사관이 접수 보고한 5건의 청원은 모두가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사항이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부소관
2. 2001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보고
가. 환경부소관

(10시52분)

○委員長 劉容泰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또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소관 2001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괄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먼저 환경부장관의 제안설명 그리고 보고를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존경하는 劉容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제출한 2001년 회계연도 환경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환경정책을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삶의 질 향상의 기본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기후변화협약의 진전과 WTO 뉴라운드 협상 등 환경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과도기적인 경기침체와 재정긴축 등 환경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전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본분에 충실한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1,453억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6,76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68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4,129억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1조1,453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1,960억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527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9억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2000년도 세출예산 1조3,023억원에 비해서 8.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2,681억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확충,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등 물관리 분야에 6,528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재활용산업육성 등 폐기물관리사업에 3,060억원, 환경기술연구개발, 환경산업육성 등 환경정책·기술개발에 1,875억원, 국립공원 관리, 습지보전대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798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굴뚝자동측정망 확충·운영 등 대기보전사업에 615억원, 세입징수비용 교부, 재특예수금 이자상환, 기타 운영비 등에 1,254억원입니다.

이러한 예산투자를 통해서 내년에는 맑은 물 공급, 폐기물 관리 등 국민생활에 기초적인 환경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환경기술 역량을 선진화하는 등 미래의 환경수요에도 적극 대비하는 균형잡힌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들에게 먹는 물 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사업에 역점을 두되 물절약정책도 가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시책을 강화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비위생 매립지의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을 본격화해서 대도시의 공기오염을 줄이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등 자연환경보전과 국제환경협력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환경부소관 예산규모 증가율은 정부전체의 예산규모 증가율 6.4% 보다 다소 높지만 환경행정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성과를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분야의 투자재원 확충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적정한 환경정책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예, 수고하셨습니다.

○**鄭宇澤委員** 기획관리실장 보고하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예, 말씀하시지요.

○**鄭宇澤委員** 지금 새삼스럽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대단히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고 또 본인이 말하기도 상당히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11월10일에 인도에서 회의가 있어 출국하는 날 아침에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최우수 의원, 최하위 의원 명단을 비행기 속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눈을 상당히 의심했는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저랑 같은 입장에 계신 몇분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날 한 내용을 제가 귀국해서 알아본 결과 이석이 빈번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 빈번한 것으로 최하위 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하위의원으로 꼽은 제일 큰 선정이유는 반 개혁적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알아보았더니 노사정위원장한테 질의할 때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발언은 반 개혁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최하위 의원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분명히 얘기하기에, 제가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제도이지만 우선 내년에 당장 실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만약 연월차수당 이런 것이 조정되지 않고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토요일에 대한 오버타임까지 해서 150%의 임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임금상승효과가 있고 특히 내년 물가에도 많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이 실시되면 상당한 물가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내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회의적이다 하는 발언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위원장한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최하위 의원이라는 선정을 했고 이것은 나중에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해서 후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과 똑같이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지급에 반대하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아무리 환경노동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흘러가는, 나아갈 방향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저와 의견을 같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 소신껏 발언한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관점에서 어긋났다고 해서 반 개혁적 발언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활동을 할 때에 자기 소신에 따라서 분명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위축시키고 국회활동을 제약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명목상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약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체크한다면, 이번의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시민단체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집단의 특정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이번에 불이익을 받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 우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시민단체의 활동을 하라고 했지 어떤 특정집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때 분명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허락해 주신 것이 최하위 의원은 여기 鄭均桓 총무도 계시고 洪思德 부의장도 계신데 그 분들이 들어오셔서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만약 워스트로 정한다고 하면 일단, 일응 생각이 그 분들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배제했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명의로 분명히 최하위 의원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그 단체에서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또 제 말씀 말고도 金晟祚 위원님이라든지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게 발언을 갖고 문제삼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다음 12월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날 국정감사보고서작성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주실 지에 대한 논의를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金文洙 위원 말씀하세요.

○金文洙委員 鄭宇澤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시민단체의, 국감연대의 하위의원 발표에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5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섯 분 위원이 하위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위원장님 빼고 나면 열 다섯 분인데 그 열 다섯 분 중에서 3분의 1인 다섯 분이 최하위 의원이다…… 납득이 안 가고 3분의 1이 하위의원이라는 점은, 국감연대의 방청을 거부한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하위의원이 1명도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방청을 허락하자고 제가 간사로서 주장해서 방청을 허락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약속은 좀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위의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하위의원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국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한 결과, 발표는 하위의원을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다섯 분이나 발표함으로써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라고 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서로 의원들 중에서 안 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소위 말하면 물이 안 좋은 위원회라고 말하지요. 고달프고 힘드는 점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위원회인데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환경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기 희생적으로 이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마음에서 제가 가책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제대로 대접은 못해드릴망정 우리 위원회에 오신 위원들 중 3분의 1이 하위의원으로 발표된 데 제가 동조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회에서 국감연대의 방청을 아예 거부한 데는 1명도 없고 나머지 다 1명씩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환경노동위원 다섯 분을 하위의원으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제가 시민단체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 제기한 결과 자기들도 예상치 못하고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사자인 그 의원님들의 명예에 현저히 손상이 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진지한 대책을 숙고하셨으면 합니다. 여야간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방청한 단체가 다 환경단체이고 노동단체입니다. 환경단체, 노동단체라고 하는 곳이 환경노동을 위해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명예를 끼쳤다는 점에서 과연 이 분들이 환경단체와 노동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어느 정도냐 하면 15대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남아 있는 위원은 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다들 이 위원회를 기피해서 오지도 않는 위원회인데 이 자리에 오셔서 일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불이익과 불명예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응분의 해명이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한나라당 의원님이 여덟 분이신데 그 중에 세 분이 하위의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일인지? 그러면 여덟 분 중에 세 분이 하위의원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우려하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객관성, 공정성을 전혀 상실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申溪輪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申溪輪委員 오늘 환경부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짓고 본 예산심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과연 그런 평가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당을 초월해서 말씀을 드리면 金晟祚 위원 같은 경우는 나쁜 평가를 받는 원인이 자기 주장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당을 떠나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깊게 얘기하면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시민연대의 국정감사 평가와 관련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金文洙 간사하고 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다음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책질의 때 내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께서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예, 지난 국감을 통해서 시민단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또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수고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시민연대가 국회를 감시한다는 그 감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또 평가라는 것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입법기능, 두 번째는 예산편성, 세 번째 국정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가장 골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나 사회가 종합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도 학력과 경험있는 연령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누가 보더라도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그것을 그런 대로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평가한 시민연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연령과 학력과 자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이력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여야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방청 내지는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의원의 자질을 평가받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을 자기들의 기준되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극히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라고 하는 평소의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사자인 鄭宇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추후 여야 간사가 예정하고 있는 국감 평가에 대한 입장을 다시 갖기로 한 그런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추후 논의를 하면서 그 논의결과에 따라서는 추후에 당 위원회가 역시 평가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라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또는 방청의 기회를 주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이 2001년도 환경부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1년도 환경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200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환경예산안 편성방향에서 환경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2001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2001년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자체수입 6,766억7,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686억6,100만원 도합 1조1,453억3,8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1조1453억3,800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 1,960억4,000만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527억1,100만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8억5,100만원으로 도합 1조4,129억4,000만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 대비 8.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9년 실적을 기초로 작성을 했고 2001년은 전망액을 추계를 한 것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수입에서 재산수입 796억8,3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세입원이 되는 경상이전수입 5,537억3,800만원 기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 융자원금회수, 차관수입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4,686억6,100원까지 포함해서 1조1,453억3,800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개요를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인건비가 436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가 증가되고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합친 사업비가 1조1,016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7%가 증가된 규모로서 1조1,453억3,800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는 1,960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527억1,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5.8%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188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도 22.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鄭宇澤委員 인건비가 16.8%인데 이것은 정부공통사항입니까?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그렇습니다.

○鄭宇澤委員 내년 기본급이 얼마 오르지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기본급 인상분은 6.7%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부문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관리에 2,836억1,500만원, 수질보전에 3,691억4,100만원, 폐기물관리에 3,060억4,800만원, 자연보전에 797억6,300만원, 대기보전에 615억3,600만원,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에 1,874억6,500만원, 환경관리기타에 1,253억7,200만원으로 도합 1조4,129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식수원 개발 다양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연차별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에 8개소 그다

음에 계속사업이 되는 것은 24개소입니다. 그래서 637억2,00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332억1,100만원, 도서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47억3,3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90억4,300만원으로서 1,30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44.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개량 및 물절약 시책추진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에 145억3,8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00억4,000만원, 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에 120억, 물절약시책 추진에 10억원, 도합 1,47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33억원,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803억3,900만원,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에 507억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200억, 팔당특별대책지역 지원에 300억, 도합 2,94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하·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하·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355억8,700만원, 공단하수처리시설 차관원리금 상환에 111억4,5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38억4,800만원, 도합 50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및 수질측정 강화사업비입니다.

4대강 광역상수원 수질개선대책사업에 99억5,100만원, 오수처리시설 지원에 72억7,1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에 41억2,900만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26억2,8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이차보전에 2억9,9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3억 이래서 도합 24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폐기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690억4,300만원, 쓰레기매립지 설치에 263억,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31억7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95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363억9,700만원, 도합 1,64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유해폐기물처리 기반구축입니다.

유해폐기물처리시설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사업비 21억5,6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폐기물처리대책에 36억7,900만원,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비 19억7,500만원,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비 15억, 폐기물줄이기 생활문화 정착비 2억, 도합 9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 촉진사업비로서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 사업비 130억, 공공재활용기반시설비 39억300만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600억원, 폐기물예치금반환금 153억2,000만원, 한국자원재생공사출연금 392억4,000만원, 도합 1,31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사업비입니다.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비 700억, 여기에는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비 180억,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비 500억,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비 20억 이래서 도합 700억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5억,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9억2,600만원,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8억5,000만원,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 188억5,100만원, 도합 93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에 600억,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에 40억, 환경관리공단 출연금 69억8,100만원, 환경산업발전기반 구축에 5억5,000만원,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활성화사업비에 4억5,000만원, 도합 71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사업비로 환경관리시범 지자체 지원은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금 증액으로 지방재정 재원으로 추진키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소년현장체험 환경교육 활성화사업비 11억5,000만원, 사전환경성 검토사업비 2억2,800만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비 6억9,700만원, 기후변화협약 대책추진비 5억원, 국제부담금 32억3,300만원, 한중일 3국 환경협력사업 6억100만원, 세계은행 공동 환경협력사업 7억, 도합 7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연구 기반조성 및 지원사업비로서 차관원리금 상환, 이것은 연구장비 도입에 따른 차관원리금상환금이 3억6,400만원,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15억원, 수

입대체경비 1억500만원, 먹는물관리체계 구축 5억6,300만원, 연구단지 청사운영 26억7,100만원, 환경연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7,600만원,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비 9억9,400만원, 연소보조장치 성능시험비 4억원, 오염총량관리기술지원비 5억원 해서 도합 7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비로서 폐금속광산토양오염방지대책비 15억1,600만원, 생태계보전대책 사업비 11억8,1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대책비 2억8,000만원, 야생조수밀렵거래방지비 11억9,300만원,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유해성 평가체제 구축비 1억4,600만원, 산불피해지역 생태조사비 2억원, 자연환경GIS-DB구축비 4억원, 도합 4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지원사업비입니다.

국립공원사업비로서 495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금 131억5,000만원,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지원비 70억, 자연생태조망시설비 15억5,100만원, 도합 71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과 관련된 사업비가 40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사업비 15억, 자동차배출가스 인증검사 종합시스템 구축용역비 6억4,000만원, 자동차 인증검사장비 확충비 37억9,600만원, 도합 4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체계 구축 및 대기측정망 확충사업비입니다.

굴뚝원격감시체제 구축비 65억7,000만원, 대기측정장비 확충비 14억4,500만원, 악취제거 타당성 조사비는 2000년도 국회심의 시 인천 서구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소음관리 대책비 1억9,900만원, 오존·미세먼지 저감대책비 6억2,000만원, 대기환경예측평가 시스템 구축비 6억6,000만원, 제2차 대기보전세계대회 지원비 1억8,300만원 도합 9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26쪽은 환경관리 기타, 기본사업비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99년8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사업,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t당 110원씩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물이용부담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쳐서 2,681억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환경기초시설설치비 542억1,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75억6,9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700억원, 수변구역토지 등의 매수비가 770억2,200만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비 280억3,500만원, 기금관리비 1억4.500만원, 여유자금운용비가 11억1,500만원 도합 2,68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대해 542억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경비가 417억,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4억원, 하수관거 이것은 지방비 부담분의 70% 특별대책지역 내는 80%입니다. 그것이 92억원, 분뇨처리시설은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의 70% 특별대책지역 내는 80% 14억원이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것도 역시 전과 같아서 15억원입니다. 그래서 542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입니다. 376억원이 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특별대책지역은 91.2%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은 7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지역 및 자치단체는 하수종말처리시설비 운용비의 8.8%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역시 같은 지원기준으로 14억원, 분뇨처리시설도 같은 지원기준으로 45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역시 같은 기준으로 31억원 그래서 도합 376억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원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별 지원내용을 보면 일반지원사업비로서 유기농업의 지원 등 소득증대 사업, 마을회관 등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그리고 직접지원사업으

로는 주택개량, 학자금 등의 지원과 어로행위 포기자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일반지원사업비 플러스 직접지원사업비 이것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일반지원사업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2권역은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등의 매수사업이 770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예정면적이 677만㎡ 단가는 ㎡당 1만66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 등 팔당댐부터 특별대책지역 내의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양안 1km이내이고 특별대책지역 밖의 경우 의암댐, 충주조정지댐까지 양안 500m이내를 매수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는 상수원관리비 31억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 수질개선사업비 227억원, 환경기초조사사업 20억원,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비 2억3,000만원, 기금관리비 1억5,000만원, 여유자금운용비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을 1,275억3,700만원, 인천시가 317억7,400만원, 경기도가 1,045억7,6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가 28억3,600만원, 전용수도설치자가 7,7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비가 13억 이래서 2,68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표로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姜長錫** 2001년도 환경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투자분야는 제안설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부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조1,453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인 948억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세입예산안 추계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되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8년도에는 948억원, 99년도에는 1,092억원이 세입예산액보다 많이 징수결정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과목별 예산대비 실적을 보면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자체세입들의 실적이 예산액보다 적게 수납되고 있는 바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징수결정되고도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이 수납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추계의 잘못과 동시에 징수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징수결정되는 주된 이유는 전년도 미수납액을 예산편성 당시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데 미수납액 중 일정비율을 예산액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배출부과금 세입예산안의 과소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2000년도 507억2,200만원 대비 33.3%가 감소된 338억2,3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는 바 1999년도 말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의 미수납금이 358억2,600만원에 이르고 있고 또한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담금의 경우는 행정청의 지도·단속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세입추계는 미수납금의 사후관리와 행정청의 지도·단속의지가 미흡함을 보여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내지 51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자연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이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자연생태계 보전사업과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1년도 신규로 29억5,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 협력금의 부과대상을 보면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등 국방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시켜 주고 있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면제 또는 50 내지 3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개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공공 및 민간 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부소관 세출예산은 1조4,129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8.5%인 1,106억 8,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표와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안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부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예산액은 5,965억7,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0.37%인 22억3,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첫째,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사업과 낙동강수계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통합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사업은 시범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474억2,800만원 투자하여 1일 용수공급량 8만t의 강변여과수를 공급할 계획하에 2001년도 예산에 30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999년12월30일에 발표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08년까지 부산·경남권 지역생활용수의 50%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고 이 중 하루 50만t 규모는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기 위해 60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부산·경남지역 강변여과수개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하류 12개 지역에 대하여 하루 120만t이 개발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입지지역의 개발수량, 수질, 환경성 및 경제성 검토 후 사업의 본격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사업과 낙동강수계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그 사업목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강변여과수 개발에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낙동강수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도 예산안에는 설계비만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시설비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30%, 환특융자 20%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예산의 조정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대구시의 6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매년 1,000억씩 해서 총 4,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00억원 중 2000년까지 3,867억원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잔여 사업비 133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99회계연도 환경부소관 세입세출 결산검토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시 하수처리장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금년 10월 현재 금년도 예산현액 2,808억3,200만원 중 집행액은 32.8%인 921억 여원에 불과한 바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여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상당액이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환경부는 지난 97년에서 99년까지 3년 기간 중 예산액 2,867억원 중 1,808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예산배정을 해왔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진척도에 상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먼저 사업의 추진정도를 재확인하고 이후에 내년도 예산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사업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환특회계 539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9%인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사업중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84년부터 97년까지 지정된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지원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액 38억4,800만원은 김해 병동, 경북 군위, 안동 남후, 서천 장항, 제주 금능 등 5개 처리장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18억과 융자금 19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 및 입주예정업체의 입주포기 등으로 인한 폐수유입량 부족으로 10개 처리시설이 미가동되고 있고 이중 6개 시설은 폐쇄조치할 예정으로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설치예정인 5개 처리장 중에서 신설하는 시설의 경우 충분한 폐수유입량이 확보되고 시설설치의 타당성이 명확히 확보될 때까지 이 사업을 보류,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자가방지시설을 설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사업 부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조정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설치비의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16개 시설에 국고 131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를 사료화하여 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전무한 사업으로서 영국 등 유럽에서는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광우병이 나타난 바 있으며 현재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은 광우병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사료화되어 소나 돼지에게 유통되는 경로나 소비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가 개별적 동물, 특히 초식동물에게 전혀 위해하지 않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료화시설의 설치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의 경우에도 예산군 등 5개소에 있어서는 염도 1% 이상을 이미 초과한 바 있으며 퇴비화된 제품을 현재 대부분의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료성분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염도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축분, 오니 등을 함께 처리하여 우수 시 비점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퇴비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검토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측정기기의 확충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다이옥신 측정장비구입예산으로는 국립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다이옥신 측정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6억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내년부터 시간당 2t 이상의 중·대형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다이옥신 검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환경관리공단의 연간 다이옥신 예상 분석시료건수가 금년도 540건에서 내년도에 850건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기 1대당 연간 420건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효과적인 다이옥신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기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종합처리시설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읍과 대구 등 두 곳의 농촌 폐비닐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66억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이 사업을 변경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업이 중단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시설설치 예산 85억2,800만원 중 27억7,400만원이 재해복구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방법에 대한 금년 11월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습식처리방법이 아닌 시멘트킬른 등 다른 처리방법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동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비를 계속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업예산의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부문입니다.

CNG 시내버스 보급사업은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CNG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금년도와 내년도의 경유자동차 증가율을 각각 11%와 12%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유자동차가 증가하는 경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의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유자동차에 의한 대도시 대기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엔진 등에 대한 기술개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전소 설치사업의 경우 금년도 목표 30개소 중 18개소만 설치되고 있는 바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굴뚝원격감시체제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액은 65억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대기환경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여천, 울산지역 내에 설치·운영 중인 총 104대의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중 70대 정도가 교체대상이 되는 등 노후화된 기기로서 측정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기기의 교체·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저공해 기술개발사업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디젤엔진의 저공해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유차 저공해 기술개발과 저공해 LPG 엔진개발에 10억원,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개발에 5억원을 각각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저공해 기술개발의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5억원을 지원하여 배기가스 재순환기술, 고압 연료분사기술, 엔진 메칭기술 등의 기술을 개발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 15억원 이외에도 2002년 이후 80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유차로 인한 대도시 공해를 줄이고 2003년부터 중·대형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유차 핵심기술개발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동 사업은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성격의 사업으로서 국가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세계대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대기환경학회의 행사인 제12차 대기보전 세계대회 및 전시회를 내년도 8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 1억8,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부의 허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사업추진 주체로 되어 있고 대회개최 후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99년도 하남국제환경박람회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부적정사용방지 및 우리나라 환경산업 이미지제고 등 사업개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사업입니다.

먼저 폐광 오염방지 대책사업 예산지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폐광오염방지대책사업은 전국에 산재된 120개소의 폐광지역 정비를 위해 5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 사업과 유사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자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산자부의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70%씩이나 국고보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도 이 분야에 대한 현재 50%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입니다.

내년도 자연보전국의 민간 자연환경단체 지원사업은 한국자연보전협회 6,400만원,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 8,800만원 등 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은 환특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금년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국고보조로 8억1,000만원을 환경관련 민간단체에, 환경부는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기금에서 5억8,500만원을 민간환경단체에 각각 지원하는 등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체계와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원단체간에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부문입니다.

먼저 연구·기술개발사업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부의 연구·기술개발사업을 보면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일명 G-7프로젝트에 180억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신규사업에 500억원,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 신규사업 20억원,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에 9억2,600만원 등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500억원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환경부의 획기적인 R&D사업으로서 환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지만 그 사업내용이 1992년부터 시작되어 내년도에 종료되는 G-7프로젝트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이전사업이 완료되고 제대로 평가도 되기 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경우에도 이전사업인 G-7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유사한 연구사업들을 통합하고 운용하여 각각의 연구개발사업들간에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연구추진주체선정, 연구과제선정, 연구결과분석, 사후조치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세대 핵심연구 개발사업과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국립환경연구원 내에 있는 환경기술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환경기술진흥원에서 이들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민간재단법인이 정부의 용역사업을 관리할 경우 예산지원 방법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기타사업 예산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 1,275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인 119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비용교부금이 74억9,3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대비 20.3%인 19억500만원이 감액·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주요 이유는 금년 7월18일 먹는 샘물에 대한 부담금 요율을 20%에서 7.5%로 대폭 인하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변화는 수돗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먹는 샘물의 개발을 촉발시켜 지하수 오염 및 수돗물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부담금납부증명표시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세수 156억원보다 훨씬 적은 83억원만이 징수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해서 작년8월9일에 설치된 것으로서 내년도 기금수입금 2,681억원에 대한 사업별 지출내역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과 주택개량 등 가구별로 지원되는 직접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방법과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등의 매수사업은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로부터의 매도희망 토지에 대하여 매수하는 것으로서 기금에 의한 토지매수는 제도 설립취지에 맞게 수질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의 토지를 우선해서 매입해 나가는 등 그 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1999년8월 수변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변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건수가 약 120여건으로 토지매수실적 11건 보다 훨씬 많아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사업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劉容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시고 시간은 15분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으로서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양당간사간에 오늘의 환경부예산과 그리고 내일 있을 노동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시고 기타 국감과 관련된 문제 여타 다른 사항들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2월1일, 아직 간사간에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2월1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국감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종합정책질의를 별도로 하루 의사일정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관계를 시간 내에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기타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朴赫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赫圭委員** 朴赫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는 하지 않고 그러면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만 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경산업에 대해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동법 28조의 제3호에 규정하고 있음"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99년2월 화재 이후 21개월동안 가동하지 못한 것은 화재 및 경영악화가 원인으로 이를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지 않음" 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1년이 넘어서 허가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정당하면 휴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업체는 부도가

97년12월8일에 났어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났다는 것은 생산업체가 화재가 난 것이 아니고 폐기물이 화재가 났으니 얼마나 이득이 갔겠어요. 한 1만t 정도 있던 것이 5,000t은 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며칠을 탔느냐 하면 장장 1주일을 탔어요. 1주일을 타서 거기에는 소방차가 1주일을 끄는 바람에 방화수화 해 가지고 식수를 먹을 수 없는 정도니까 그런 사유를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금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朴赫圭委員 그것을 계속 봐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류로 해 주세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赫圭委員 19쪽에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에 따른 예산지원 부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되어 오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법률에 규정되면서 대상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기존의 330개에서 600개로 증가되고 지자체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개발사업 등 연간 2,000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을 위한 사업비로는 2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비, 전문가 운영수당 등의 행정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액은 8개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별로 보면 평균 2,850만원꼴로 배정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근본적인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께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사업별 검토기준이나 검토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환경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이 적정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기획예산처에 이것과 관련하여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部長官 金明子 말씀하신 대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그 기대가 환경부로서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정부조직의 축소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0월17일에 환경부 본부에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해서 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비롯해서 국토보전을 위한 신규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환경관서별로 각각 그 지역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 20명을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아웃소싱에 의해서 이 신규사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대폭 증가되어서 약 2,000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약 700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검토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면서 본부와도 긴밀한 연계하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지난 7월에 사전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관서로 보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2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확충되도록 예산면이나 전문인력면에서 보강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朴赫圭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성서공단 저류조 설치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99년12월에 낙동강종합물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낙동강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대책에 의하면 낙동강수계 중·상류지역에는 기존의 공단 외에도 계획 또는 조성 중인 공단이 많아 산업폐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로 취수중단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완충저류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물질을 줄이고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더라도 하천으로의 직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완충저류조 시스템의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성서공단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과연 정부가 낙동강수질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환경부는 당초에 성서공단에 저류조를 시범설치하고 낙동강유역에 완충저류조 설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에 73억원의 예산투자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저류조 설치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둔다는 뜻에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신규공단에 대해서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주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단지를 조성하면서 완충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기존 공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소요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해서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200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환경부 예산안에는 낙동강유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용역비로서 10억, 성서공단 완충저류시설 시범설치사업비로서 약 6억3,000만원 등을 요구했는데 예산당국의 예산배정원칙에 어긋나는 성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액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특히 낙동강물관리대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낙동강물관리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지역의 지자체와 중앙정부,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들이 결국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아주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가능한 쪽으로 계속 예산당국과 나머지 기간 동안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추가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정부로서도 이 낙동강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朴赫圭委員 그러면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협의할 만큼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당국으로서는 또 배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赫圭委員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라도 만들어서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겠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赫圭委員 다음은 물절약시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돗물 절약시책 홍보사업의 목적이 물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생활양식을 물절약형으로 개선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려 물을 낭비하는 생활습관을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UN에서는 지난 93년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했고 건교부의 수자원 장기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연간 4억t의 용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물절약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추진수단별 물절약 목표에 국민들의 물사용 형태를 변화시켜서 물사용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는 환경부가 물절약시책추진사업에 있어 계량적인 사업목적, 목표 즉 물절약 캠페인을 통해

서 어느 정도 물절약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목표설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량적인 목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물절약캠페인은 한낱 일회성이나 전시성 사업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물절약 홍보캠페인을 여러 가지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어떤 홍보가 우리 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광고접촉률에 있어서 TV가 79%로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신문광고가 52% 정도였습니다. 지난 4월24일부터 5월7일 사이에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朴赫圭委員 그런데 11월 현재 물절약시책추진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예산 9억 7,800만원 중 99.07%인 9억6,900만원을 사용했는데 TV 캠페인이 2억5,500만원, 신문광고비 1억900만원, 홍보책자 등에 6,000만원, 세계 물의 날 행사에 2억400만원 등이 사용되었고 각종 인쇄비로 7,2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는 물의 날 행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사용되었으며 이 밖에 선전탑, 육교현판, 포스터, 기념품, 감상문 공모전, 열린음악회 등에 지출하였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성이나 지시성 사업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는데 특히 물의 날 행사에는 2억4,0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여 물의 날 행사를 치르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매체를 이용해서 물절약을 홍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여직껏 우리의 물정책이 공급위주에 좀더 가까웠다고 한다면 이제 2000년 21세기에는 그것이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로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한 5,000명이 모이는 행사였고 그리고 식전행사도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다시 비디오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또 다른 홍보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朴赫圭委員 반면 물전략 시책 연구에는 물수요관리정책연구비로 고작 1,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사업계획을 보면 TV광고에 올해 집행된 예산보다 많이 책정했지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려면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방송매체에 좀더 비중을 높여야 할 것 같고 또한 캠페인을 통한 절약된 물의 양에 대한 계량적인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연구비에 1,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물정책을 수요관리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15가지 큰 정책으로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목표 대비 추진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계속 전문위원회인 정책심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훨씬 더 큰 비중이 됩니다. 여하튼 금년도 상반기 물절약 성과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기준년도가 98년이 되는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물생산량이 상반기 현재로 3.1% 즉 8,900만t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억원의 물생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朴赫圭委員 위에서도 말했듯이 물절약홍보사업이 일회성이나 전시성에 그치지 말고 국민들의 낭비적 물사용 형태를 바꾸고 기초조사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계량적인 물절약 홍보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朴赫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委員長 劉容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오

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회의에서는 韓明淑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明淑委員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제가 이것은 국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강조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폐광오염방지대책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충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폐광산에 대해서 국고 87억5,800만원을 95년에서 99년까지 지원을 했고 99년하고 2000년도에 각각 4개 사업에 그리고 2001년도에 3개 사업으로 보조사업 신청건수가 굉장히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폐광산 소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신 대로 폐광산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조사한 이후에 산업자원부의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70%나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환경부도 이 분야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금 50%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검토보고서를 제가 다시 한 번 인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국감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농촌 폐비닐 종합처리시설 설치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나왔지만 환경부가 아직 처리방법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사업비를 계속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기는 했지만 84년부터 2000년6월까지 1조3,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95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81년도 1월 경제기획원에 농외소득개발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2년 뒤인 83년12월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했고 다음해 84년8월 강원도 등 7개 도에 1개씩 시범농공단지를 지정·운영해서 2000년 6월까지 295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1조 3,543억원의 국고를 보조하고 융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의 대부분인 212개소를 87년과 91년 사이에 경쟁적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들 농공단지에서 배출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별방지시설로 처리하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연계처리하는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89개소의 현재 농공단지에 533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가 대체적으로 소규모이고 농어촌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서 인력확보가 곤란하고 유통비용의 증가 등으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데다가 상당수의 입주업체가 자금난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해놓고도 오·폐수 유입량이 부족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89개의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정 운영되고 있는 처리장이 36%에 지나지 않은 32개소 정도이고 64%인 57개 처리장이 부적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의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대비 유입량이 30% 미만으로 유입량이 부족한 경우, 오·폐수의 유입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낮게 유입되어서 처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유입되는 경우, 유입농도가 설계농도보다 지나치게 높게 유입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89개 중에 79개 처리장만 가동되고 10개 처리장은 아예 처음부터 가동을 못했거나 중단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사진을 찍었는데 경남 창녕 남지와 전남 여수 화양인데 이렇게 크게 설치해 놓고 지금 거의 녹이 슬어버렸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동하지 못한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제천 강저, 영동 괴산처리장, 전남 담양 무정

처리장, 경북의 상주 외답처리장, 문경 산양처리장, 경남 창녕 남지 이렇게 여섯 개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도 오·폐수의 유입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폐쇄하고 시설을 철거할 예정으로 있어서 정말 국고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64%가 부적정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쓸모가 없어서 다시 철거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등 설치하더라도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 모르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에 대해 환경부는 2001년도 예산에 얼마나 계상하고 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약 38억 되지요.

○韓明淑委員 38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투입해서 지금 계속사업 1개소와 신규사업으로 4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정말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환경부가 엄밀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함으로써 방류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처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처리장 중에서 오·폐수의 유입량 부족으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리장은 주변의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등에 연계 또는 이송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 신규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공장들의 입주가 부진할 경우에 자가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하수처리장 등에 이송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새롭게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하실 수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우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개소가 2001년도 농공단지 예산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김해 병동이 계속사업이고 군위가 시설증설이고 그 다음에 서천 장항, 북제주 금능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은 안동 남후 농공단지의 경우입니다.

○韓明淑委員 신설은 두 군데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신설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전국의 농공단지 폐수처리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문제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韓明淑委員 그것이 아직 미진하지요? 그것을 꼭 좀 해주셔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금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 폐비닐 대책 이것도 정말 아주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식이니 습식이니 하는 종래의 처리방법으로 결국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책이 아직 찾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농촌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로서는 새로 나온 방법 중에서 도입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다양화시키는 쪽으로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대책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놓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쪽으로 하나하나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멘트킬른에 공급 처리하는 사업을 또 하나 구상한 것입니다.

○韓明淑委員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경우 이것을 습식·건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환경부가 이렇게 해야 좋을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떤 스타일의 시설을 해야 이것이 완벽하게 될지 이것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설치하는 경우에 또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런 석유화학제품의 합성수지 종류들은 일단 고분자화합물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재생처리해서 다시 쓰임새가 있을 만큼 질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두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대하게 쏟아져 나오는 나라가 없는데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네델란드같은 곳도 글래스 하우스를 그야말로 글래스로 짓지 이렇게 비닐로 지으면서 계속 버려지고 있는 딱한 사정인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韓明淑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진의를 아셨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하수관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99년도 말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 총 연장이 6만4,741㎞인데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62.7%로 선진국 하수도보급률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이 71%이고 영국, 스위스, 네델란드가 90%대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95년부터 99년 말까지 최근 5년간 하수관거 불량상태를 조사한 결과 2만8,266㎞가 조사되었는데 불량한 곳이 160만9,655개소나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17.6m당 한 개꼴로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하수관의 이음부 불량이 53만4,000건 정도로 제일 많았고 연결관 돌출이 45만5,000건, 파손침하가 34만 정도, 관내 퇴적이 24만 정도, 타관 통과가 4만8,639개소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할 때 무인카메라, 로봇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관이 통과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인카메라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퇴적물이 쌓여서 막힌 부분입니다. 거의 막혀버렸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 멀리서 보면 아마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비용을 보니까 이것이 1,210억 5,5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 당 428만원이나 소요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하수관거의 불량이 설치 후 사용 중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음부 불량이라든지 연결관 돌출 등이 가장 많은데 시공 당시의 불량이 전체 60.9%나 돼요. 그래서 97만9,000개소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말 기준 가동일수 6개월 미만의 신규처리장을 제외한 정상 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250개소의 수질을 분석해 봤더니 유입수질이 BOD 100ppm 미만이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고 60ppm 미만도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수관거의 정비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중에 하수처리시설사업비가 6,064억원으로 배정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는 3,638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신·증설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의 하수관거부터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설 관거의 경우에는 광역시가 30%, 도청소재지가 50%, 시·군·구가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보수의 경우에는 광역시 10%, 도청소재지 20%, 시·군·구가 30%로 굉장히 낮게 지원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신설 관거의 경우처럼 조금 더 보충해서 높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법과 관련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수관거의 설치업무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소규모 분할발주로 시공업체가 난립해 가지고 저가수주가 성행하고 있고 공사 시공자가 영세하고 감리제도가 미흡해 가지고 하수관거 시공 당시부터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의 설치업무도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시공사를 참여시켜서 설계 및 시공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업무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설치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하수도법 개정에 이 부분을 삽입시키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좀 관찰하셔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재원배분비율에 있어서도 상향조정되어야 되고 하수관거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법 개정을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韓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吳世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勳委員 저는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 환경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하도록 하고, 그래서 수출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지금 현재 선진국과의 기술적인 격차를 감안하면 이 사업이 사실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른바 G-7사업의 후속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시기상으로 봐서 내년에 끝나고 하나는 시작되고 하니까 그렇게 연계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吳世勳委員 시기적인 것보다도 사업내용으로 볼 때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렇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吳世勳委員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G-7사업이 내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평가해 본 것이 있나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것은 환경부 단위의 평가라기보다는 이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점수를 받으면서 거기에 바탕해서……

○吳世勳委員 그 외에 환경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신경써서 평가한 것이 있어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부가 그 동안에 R&D 관리의 측면에서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평가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G-7사업을 통해서 환경기술 분야에서 발전된 분야가 무엇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를 들면 천연가스 버스사업도 G-7프로젝트에서 연구를 했던 것이고, 실용화 실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용화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취약성입니다.

○吳世勳委員 전반적으로요? 천연가스 버스엔진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아니, 전반적으로……

○吳世勳委員 전반적으로 환경기술의 경우에 실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실용화율이 그렇게 높지 못한데 이것은 전체 국가 R&D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吳世勳委員 그러면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이것이 원래 조각조각 소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전체에 대해서……

○吳世勳委員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吳世勳委員 어쨌거나 환경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산업화하고 이것을 가능하면 수출까지 하고 이런다는 목적하에 지금 돈을,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500억 정도 투여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G-7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챙겨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G-7사업 개별과제명, 과제별 예산, 과제수행 연구단체와 연구원 명단, 각 과제의 선정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평가한 것이 있다면 각 과제별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

업내용은 무엇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우선 G-7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吳世勳委員** 차세대?

○**環境部長官 金明子** 차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등급을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고요.

○**吳世勳委員**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요?

○**吳世勳委員** 질의 좀 하고요.

이번에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환경정책국장입니다.

크게 5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었고 또 세부과제는 21개로 구분해서……

○**吳世勳委員** 그 자료는 제가 미리 받아 가지고 있는데, 사전오염예방기술, 지구환경보전기술, 통합관리기술, 생태보전기술, 환경정보기술로 5개로 나누었고 세부적으로 나눈 것도 받아 보았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느 부분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통합환경관리기술 개발인데요, 500억원 중에 그 부분……

○**吳世勳委員** 통합관리기술이요? 그 이유가 뭐예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종래에는 환경기술을 물, 대기, 쓰레기,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소스를 어떻게 제외할 것이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했는데 앞으로는 배출된 오염물질이 생태계나 자연이나 사람이나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피해를 받는 개체 쪽에서 봐 가지고 사전예방적으로 통합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통합환경관리기술인데 종래에 매체별로 물, 대기, 쓰레기 그 기술은 G-7사업과 병행해서 선진국의 한 60%, 70%까지 우리 기술수준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발전시킴과 함께 선진국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핵심부품, 핵심기술이 3,40%가 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100%……

○**吳世勳委員** 선진국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분야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吳世勳委員** 외국과 별로 격차가 없는 것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G-7이 당초 목표는 92년도에 2001년까지 선진 7개국 기술수준까지 따라잡겠다 이렇게 출발하기는 했는데 그 10년이라는 연구기간이 R&D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반기술개발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吳世勳委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 그런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나 싶어요. 어떤 때에는 외국과의 격차가 비교적 없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 어떤 때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좋아요. 어느 분야가 외국과 많이 차이가 있고 어느 분야가 외국에 많이 근접되어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자료 있어요? 나중에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전담하는 기관이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입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최근에 환경기술진흥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吳世勳委員** 이것 아직까지는 민간법인으로 만든다는 그것은 아니지요? 그냥 이름만 바꾼 겁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吳世勳委員** 현재 인원이 몇 명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31명입니다.

○**吳世勳委員** 이 중에서 제가 좀 알아 보니까 2년동안 채용된 14명의 전문위원 중에 7명이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맞습니다.

○**吳世勳委員**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습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이것이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 보장이 어렵고 또 급여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사를 아주 여러 번 호되게 받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석·박사급입니다.

○**吳世勳委員** 그 감사는 어디에서 했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감사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吳世勳委員** 그 감사원 감사 받은 결과 좀 제출해 주세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올해 받은 것은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마는 과거에 받은 것……

○**吳世勳委員** 언제쯤 옵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내년 초가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吳世勳委員** 나오면 바로 보내 주세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吳世勳委員** 그리고 그만 두었던 사람들 명단하고 연락처를 제출해 주세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吳世勳委員** 좌우간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그렇습니다.

○**吳世勳委員** 지금 여기에서 사후에 검토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니예요? 이 500억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다 합니다.

○**吳世勳委員** 그런데 이런 인적자원 가지고 이런 조직 가지고 500억원이나 되는 예산…… 특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쭈어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이 조직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대해서 ……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갖는 독립부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임의형태의 31명 이 조직 가지고는 500억원 예산을 목표한 대로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吳世勳委員**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보내 주십시오.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吳世勳委員** 지난번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때 언론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제3자에게 연구계획서를 대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가 다른 부처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그러고 또 환경기술에 대해서도 뭐 하나 지적된 것이 있던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연구비를 부풀려 가지고 연구비를 산정하는 경우에 통제가 쉽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무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관리한다든지 회계관리하고 이런 것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3단계 평가제도도 도입하고 그런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서류심사를 지양하고 현장중심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후관리나 평가가 통과의례가 안 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관리를 하려면 무슨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吳世勳委員**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술개발할 때 이렇게 기술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이 환경기술은 공공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야말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吳世勳委員**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뭐 공공기술이고 또 영세한 사람들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에 애써서 자금 투여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상용화 하거나 실용화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좌절이 많거든요. 기술은 좋지만…… 그럴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이것이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가 도와 준다면 몰라도 처음부터 그것을 사안을 정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하고 과제를 주는 식으로 숙제를 주는 식으로 해서 도와 주면 중간에서 새는 예산도 많고 상당히 비효율적이 아닌가? 비효율이니까 자꾸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충원하고…… 학자들이나 연구단체 이런 데에서 이것을 프로젝트 땄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러한 사업을 지금까지

처럼 계속해 가면서 또 다시 인력을 보충하고 돈을 들여서 감시하고 감독기관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런데 국가 R&D 예산이 전체예산의 4%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5%까지 올라갈 것인데 그 중에서 환경관련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도에 1조가 훨씬 넘었는데 여하튼 환경관련 R&D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고 과학기술부의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구개발 쪽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환경산업·기술 이것이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따라서 R&D 지원필요성이 커졌고 전체 국가로 보면 80% 이상의 R&D를 민간부문이 하고 있고 나머지 20% 이하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환경부문은 공공으로서도 그렇고 이 정도 지원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오히려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吳世勳委員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당장 이 연구개발비를 깎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을 쓸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조금 싼 기계를 들어놓고 비싼 것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낮춘다든가 속된 표현으로 나라의 연구개발비는 먹는 사람이 임자다, 학계에 계셨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아주 느슨하게 관리되던 것을 당장은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의지가 있고 하고 싶어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비용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찾아서 도와주는 방법 또 그런 사람들이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상용화하고 실용화하는 데 좌절을 느껴서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방법 등 좀더 효율적이고 충실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관련자료를, G-7사업의 경우에라도 좀 보고 그것을 다음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吳世勳委員 준비한 것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나중에 소위위원한테 넘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朴仁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委員 우선 환경부의 예산에 대해서 총괄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분석도 잘해 주셨고 사실 금년도의 환경부 소관예산이 1조4,129억원인데 이것은 국가예산의 전체 증가율 6.3%보다 약간 높은 것이지만 전체 대비로 보면 1.39%로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예산이 총 101조300억원인데 환경부의 예산은 2조9,747억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6.1% 증가했는데 전체 정부예산의 증가율과 비슷합니다.

환경부문 중에서 환경부소관은 사실 절반도 못 미칩니다. 예산 전체에서 환경부예산이 47.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수질보전양여금이 1조1,254억원으로 37.8%가 거기에 있고 건교부의 광역상수도에 3,982억원으로 13.2%, 해수부의 해양보전에 433억원, 1.5%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2조9,747억원인데 실제 환경부에 와 있는 것은 50% 미만의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식입니다. 장관님 이것 인정하시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朴仁相委員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유인제도의 실효성 확보관련인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원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예치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들은 예산체계상 세입원이지만 당초 취지는 경제적 유인수단이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지요.

○朴仁相委員 그런데 각종 부담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당초 취지보다는 세입원 확보에 상당히 치중하지 않았느냐? 아까 경제적 유인형태라고 장관님께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세입을 끌어들이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글쎄요……

○**朴仁相委員** 아까는 답변해 놓으시고 뒤에 가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

○**朴仁相委員** 알겠습니다. 각종 부담금의 징수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실제 징수율은 69%입니다. 그런데 폐기물부담금만 99.6%로 징수율이 높은 반면 배출부과금은 41%, 수질개선부담금이 59.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70%, 폐기물예치금은 76.9%…… 별로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실제로 배출되는 양과 농도에 따라서 부과가 되지 않고 추산치 기준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냐 보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양과 그밖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정확한 산출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데이터 부족이라든지 역부족인 면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성격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인데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치를 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폐기물부담금문제입니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품목 중에 재활용할 품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에 보았을 때 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예컨대 금속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용기……

○**朴仁相委員** 화장품용기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재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예치금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래서 그러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폐기물예치금 반환율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99년도에 44%로서 여전히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유인성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보고 특히 각종 부담금의 목적을 세입원에 두는가 경제적 유인에 두는가, 아까 장관님께서는 유인수단으로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환경부로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영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9억5,400만원인데 요즘 조를 다루는 판국에 30억 미만이다 그러면 돈이 별로 많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이 돈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아주 복잡미묘하게 되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97년8월에 1999년1월 시행계획으로 신설이 되었다가 98년9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1월 시행시기를 2001년1월로 연기를 했고 올해 1월에 제도개선안이 나왔고 또 금년 11월에 국무회의에서 제도개선안과 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을 국회에 확정해서 보내기 전에 이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확정이 된 것이라기보다도 요……

○**朴仁相委員** 국회에 예산이 10월에 왔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朴仁相委員** 10월에 왔고 제도개혁은 국무회의에서 11월에 했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나타나 있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라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죽었던 것인데 살려내서 하는 과정에서 안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부로서는 절차를 밟아서 예산추계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는 그러한……

○**朴仁相委員** 이것 전에 예산을 확정했지요? 분명하게 확답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법률 결의한 일정하고 국회에 예산이 넘어온 일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개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보냈다 하면 답변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래서 제 얘기는 현행 법령에 준한 것이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이 법률 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법개정 내용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현행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리고 또 앞으로 법률을 고치려고 국회에 갖다 놨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朴仁相委員** 지금 그 부분하고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현행법, 개정법률 두 개 중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준에 맞추어서 설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정리한 것이냐 저도 헷갈려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시기보다 그 예산안 추계한 것이 앞서는……

○朴仁相委員 저도 헷갈리는데 유능한 장관님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률에 맞추어서 나왔는지 장관님도 모르실거예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개정된 내용에 맞춘 것입니다. 주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면 좀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環境部自然保全局長 全炳成 자연보전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9억5,000만원에 대한 세입추계는 현행 법령은 아니고요, 그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부처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부처간 협의를 했었는데 그 협의안을 가지고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변경이 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런데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또 이것 전체를 보아도 환경부가 예산을 얻으면서 확실한 근거와 기준, 법률 조항이 적용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내일까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앞으로 개정될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짰다고 하시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環境部自然保全局長 全炳成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편성의 부과 대상 중에서 국방이나 군사시설에 대해서 협력기금을 면제시켜주고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는 50%, 30%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타는 경감이 없습니다. 물론 차츰차츰 이것을 경감시켜 가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환경부가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위원들도 혼란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장관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環境部自然保全局長 全炳成 종전 법에서는 시행령에서 국방사업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하거나 30% 또는 50%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안에서는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 등 이와 유사한 사업 외에는 민간과 동등하게 협력금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특히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런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앞으로 자꾸 개정될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지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환경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부족하다 애당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들어 오는 것이 누가 봐도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물론 법안심사때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작으나 크나 예산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제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내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일정에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상태에 와 있는데요……

○朴仁相委員 앞뒤가 안 맞는 것은 틀림없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데요, 상임위에서 이것 잘 되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朴仁相委員 우리 장관님이 절대 안 맞다는 소리를 잘 안 하시는데 오늘은 확실히 뭔가 틀리기는 틀린 모양이네요.

그다음 예산체계 문제인데 지금 환경부문 예산 중에 환경부 소관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행자부소관 예산에 수질오염방지사업 명목으로 1조1,254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건교부 것, 행자부 것 다 빼

고 나면 50% 미만되는 예산놓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행자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다른 부처에 줌으로 해서 지금 심의권 자체를 제한해 놓은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장관이 아니라고 항의를 할 것이에요. 장관님 이것이 국회심의권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것은 환경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은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朴仁相委員 그렇지요. 절대 동의는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제한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제한하는 것을 몇 가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예산은 환경 예산이 맞지요? 행자부에 있든 건교부에 있든 그것이 환경을 위해서 쓰는 예산 맞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부 예산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부처가 반대를 하겠지요.

○朴仁相委員 그 쓰여지는 곳이 전부 환경 예산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국가 차원에서 보면 환경 예산이지요.

○朴仁相委員 그 다음에 계상과 집행은 행자부가 맡고 있는데 실제 편성하고 배정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협의를 하지요.

○朴仁相委員 협의를 하든 뭘 하든 편성하고 배정 부분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예산편성 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소관에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비에 대한 배정권은 저희 환경부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소관에 있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지방양여금 부분은 저희 환경부에서 예산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라든가 건교부 것은 이미 거기에서 예산집행하면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행자부 예산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편성하고 배정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권은 행자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환경부 예산이다 보니까 별로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도 제대로 안 다루어지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별로 안 다루어지니까 이 심의권이 어디로 가 버렸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이 심의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장관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요? 이제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환경부 예산은 환경부 자체에서 가지고 해야 하지요. 편성과 배정을 해줄 수 있으면서도 환경부에 못 가져온다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법적인 예산을 짜는 것보다는 국가 틀에서는 환경부에서 집행하고 배정할 예산은 환경부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해양수산부라든가 건교부는 자체에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에 대한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비를 24.5%를 환경부 소관으로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해주는 것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단지 지방양여금 중에서 수질개선사업비를 24.5%를 가지고 오느냐, 앞으로 30%를 더 가지고 오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환경부 독단으로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朴仁相委員 그래서 환경부로 계상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부가 편성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보다 많은 금액의 환경 예산을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예산체계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님, 그것도 부인하시겠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부로서야 환경에 관련되는 예산을 다 가져다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정부 부처의 기능 또 지방자치제가 엄연히 존재하는만큼 그 고유기능의 관계 이런 맥락 속에서 결국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권은 환노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편법적으로 예산을 이쪽, 저쪽 숨겨서 간다는 것은 투명성

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 예산을 심의할 때 전체 환경 부분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 각 부문의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지금 朴仁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1조1,254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막대한 돈인데 이것을 환경부가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볼 수 없는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행자부에서 계상하고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별도로 상의를 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환경노동위원회에 환경부가 그 설명서를 내고 그 설명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朴仁相委員 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 예산권을 사실상 봉쇄 당하고 있다 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정확하게 이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는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朴仁相委員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樂冀委員 폐기물관리사업 예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촌폐비닐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은 오전에 수석전문위원의 소상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韓明淑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대신 쓰레기소각장 건립예산의 선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98년도에 남양주와 김해, 상무 등에서 발생한 소각시설 미집행액 103억원을 강남, 울산, 광명 등에 선집행했고 99년도에는 마포, 화명, 남양주 등 9개 지역에서 발생한 143억원의 미집행액을 인천, 파주, 광명 등 7개 지역에 선집행했으며, 올해 또한 78억원이 계획 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미집행액이 발생되니까 이월 또는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다른 지역에 선지원을 한 것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아시다시피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차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해서든지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예산안 개요 14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예산이 690억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계획 대로 집행되겠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매년 발생되고 선집행하는 것을 볼 때 예산이 계획 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690억 가운데 올해 미집행된 것만큼 삭감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글쎄요,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다 집행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을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확보가 되고 그것을 최대한 쓰는 그러한 쪽을 원한다는 말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金樂冀委員 98년도에 103억, 99년도에 143억, 올해 78억원 등 매년 미집행액이 발생되면 선집행하고 있는데 그 비율만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16개 지역 가운데 밀양, 마산, 청주, 춘천, 대전 등 다섯 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이 다섯 곳은 공사가 재개되는 것입니까? 폐기물국장 답변해 보세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폐기물자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동안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남는 예산을 익년도 사업상 필요한 지역에 선지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적으로 지금 선지급액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 착공이 불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일단 계속사업 지역 중에서 이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 지역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100% 저희가 된다고 보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가만히 계세요. 다섯 군데도 100%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100% 된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섯 군데의 예산은 178억원입니다.

○**金樂冀委員** 열여섯 군데 중 다섯 군데로 예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열여섯 군데에 480억원인데 지금 돈이 나가고 공사가 중단된 곳 그 중에 다섯 군데는 재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전, 청주, 밀양, 마산, 춘천인데 예산은 186억원입니다.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나머지는 기존예산에서 다 할 수 있고 다만 부여의 경우 저희가 8억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렇다면 다른 얘기 부수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열여섯 군데 중 다섯 군데는 공사가 재개된다는 것이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열한 곳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열한 곳의 294억원은 환수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아닙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294억원이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金樂冀委員** 아니 환경부 자체에서는 집행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그 294억원이 잠자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돈만 주고 지자체는 공사가 중단 되었으니까 그냥 이 돈이 잠자고 있는데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저희가 294억원을 미리 준 것은 2001년도 사업할 지역을 금년도에 미리 지급을 한 것입니다.

○**金樂冀委員** 2001년도에 할 것을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여기 왜 재개된다는 다섯 개소 이것도 2001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16개소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그 중에서 부여의 경우만……

○**金樂冀委員** 부여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데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열여섯 군데, 공사가 중단된 곳을 얘기하는데 이 열여섯 군데 중 다섯 군데는 재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18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11개소는 이미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294억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수 조치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현재 문제 소각장이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저희로서는 부여소각장을 빼놓고 나머지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부여소각장이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金樂冀委員** 그러면 부여까지 하면 열일곱 군데입니까? 어디 소각장이라고 하나하나 개소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재개되는 곳에 대한 예산 186억원 이것은 재개되는 것 확실하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나머지 11개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추진 보류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추진 보류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열여섯 군데입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무슨 부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 그러면 됩니까? 그 열여섯 군데 중, 실무국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 중 다섯 군데는 예산에 계상했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2001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나머지 열한 곳은 이것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그 지역은 현재 물론, 각각 처리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입지를 재선정하는 지역도 있고 공사재개 준비를 하는 지역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金樂冀委員 제가 지적하는 주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정부가 미리 지자체에서 입지선정도 제대로 안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만 먼저 선집행해서 돈을 내려보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돈을 갖다놓고 자기네 반대하면 국고는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공사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사중단으로 국고 294억원이 방치되고 수백억원의 지원예산이 선집행되는 등 방만한 예산집행 형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융자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특융자사업은 지방 상수도 개량,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등을 위해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자체에 지원하는 융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환경부가 직접 심사를 하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金樂冀委員 그런데 99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서 36억2,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은 지자체가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金樂冀委員 심사를요?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재특융자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른 그런 융자자금 보다도 이자율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자금을 쓰기를 기피하는데서 이런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작년과 올해 지자체가 재특융자를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금년에 약 200억원, 작년에 약 36억원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 상수도시설개량사업의 융자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자체사업비가 없는 경우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지요.

○金樂冀委員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것을 융자해 줄 때에는 지자체 자체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해줍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아니지요.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를 확보한다 하는 전제조건을 달고 하는데 지자체의 재정확충 능력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에는 사업의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확보해 놓고 저희들 환경부에다가 재정융자를 해 주기를 신청해 놓고는 그 다음에 연도 중에 지방자치단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다른 데에 많이 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재특융자금이 불용액으로 남고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재특융자금의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지금 11월 현재 변동금리 포함해 가지고 7.1% 정도 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정수장배출수 처리시설 융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정수능력이 1,000t 이상 되고 역세하는 정수장은 98년8월12일까지 폐출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11월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이 3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비용을 재특에서 100% 융자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이유는 지자체가 부채 부담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金樂冀委員 그렇다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은 지자체에서 하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金樂冀委員 그런데 그러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자체가 민간기업의 위법사항을 단속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감독관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민간에 대한 감독이 안 되겠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어렵겠지요.

○金樂冀委員 자치단체 시설은 폐출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해도 되는 것

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민간을 감독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1,886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960억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금 리의 부담으로 예산의 30% 이상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환경개선 자금은 98년에 35%, 99년에는 28%가 이월되었고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자금도 98년에 29%, 98년에는 38%가 이월되어 재특융자사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특융자사업의 예산을 30%를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토록 건의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융자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또 국고 지원조건도 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후관 개량사업의 지원범위, 대상범위도 확대해서 상수도관 탐사라든지 관망도 작성 등등 새로운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 자원관리 주체가 선투자하고 또 이익금을 사후에 회수하도록 하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개량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樂冀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계속해서 李浩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委員 지구환경개선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엊그제까지 열렸던 기후협약변화에 관한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시고 어제 막 귀국하셔서 시차도 아직 극복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몸으로 뛰어 주시는 장관 이하 환경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피곤하신 데도 전혀 기색이 안 나타나시고 참 강건하십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감사합니다.

○李浩雄委員 먼저 환경연구와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7환경공학 기술개발에 이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및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환경연구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2000년에는 200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2001년도에는 700억으로 무려 500억이나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에 50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업관리 전담기관이 어디인줄 아시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李浩雄委員 국립환경연구원 내의 환경기술진흥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G-7프로젝트를 관리한 사업관리전담기관도 동일기관이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李浩雄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기술진흥센터가 연구비 정산 부적정, 부가가치세 과다계상, 정산업무처리의 지연 등 연구비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李浩雄委員 본 위원이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기획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기획안은 아직까지 작성 중이라고 해서 초안만을 받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핵심환경기술개발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기획안조차 제 때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과연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업 초안에서 보면 개발목적에 기초해서 통합환경관리기술,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기술, 사전오염 예방기술, 지구환경보전기술 및 환경관리정보화 촉진기술로 5개 단위사업을 설정했습니다.

5개 단위사업 중에 환경관리정보화 촉진기술이라는 것이 환경지표 산정 및 통계조사기술, 홍보 및 교육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홍보 및 교육기술이 환경관련 당면 핵심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4개 기술에 비해서 부차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비슷한 비중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및 교육기술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보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浩雄委員** 그렇지요. 중심적인 사업의 범주에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李浩雄委員** 통계기술이나 홍보기술과 교육기술에 50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교육부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프로젝트를 환경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당장 장관님께서 참석하셨던 헤이그에서의 기후변화협약 제6차 총회에 다녀오셨지만 얼마나 그런 사안들이 앞으로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익에도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잘 인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무역에 끼칠 영향까지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가 미비할 경우 심지어는 우리가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중차대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습니다.

지구환경보전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상당히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李浩雄委員** 비교가 안 될 정도지요? 제가 환경부의 자료로만 봐도 50% 이하 심지어는 10% 정도까지도 나타난 정도인데 특히 지구환경보전기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보유하지 못한 에너지절약관련기술, 특히 기후변화협약에서 주제로 다루어진 것 아닙니까? 또 재생에너지개발관련기술 등에 대한 기술개발은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에서 지적한 환경관리정보화촉진기술예산을 삭제하고 그 50억을 온실가스감축이행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 이렇게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연구과제에 책정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이 환경관리정보화촉진기술이라고 해서 여기 몇 개 카테고라이즈한 것은 사실상 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환경보전기술이니 기타 기술 정보 이것의 총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 하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적인 활동, R&D에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내용을 내실화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런데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획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기획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이런 수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사실은 환경부가 이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조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축소라는 흐름에서 그것이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처럼 환경부가 환경기술개발예산으로 이렇게 500억을 일단 정부안으로서 예산안에 편성한 만큼 정말 큰 책임감을 갖고 여지껏 과학기술연구활동에서 쌓아온 관리의 노하우를 전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켜서 차질이 없게 시행착오가 없게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안 단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 R&D 관리하는 가장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특이하게 A평점을 받은 만큼,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좀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주제를 놓고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선정하는 등 공청회 그밖에 자문회의 등등을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안을 완성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浩雄委員** 그런 의지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吳世勳 위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전문위원 14명이 2년간 그 중의 반수가 사직한 바 있고 이직률이 50%나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0억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연구비정산 부적정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환경기술진흥센터에서 과연 500억이나 증액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기준으로 볼 때에는 700억이라는 예산을 관리하기에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다음에는 폐비닐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방치할 경우 토양오염 문제와 함께 농촌에서 임의로 소각함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문제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폐비닐 수거 및 처리시스템으로서는 총 발생량의 60% 이상을 매년 방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폐비닐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전국 규모, 전반적인 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우선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농촌 폐비닐에 대한 실태를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품 비축 처리시설에 13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중 폐비닐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폐비닐 처리시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습식 처리방식은 경제적 측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처리방식으로서 이미 신규 발주 중인 습식 처리시설 2기의 경우 사업추진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李浩雄委員** 기 발주된 공사는 현재 완료된 부분까지를 준공 처리하여 13억원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정확한 액수를……

○**李浩雄委員**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사업성 평가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경우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산상 13억원의 예산상 낭비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기성고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낭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李浩雄委員** 앞으로는 이런 재원의 낭비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렇다면 기존 습식처리방식으로 생산되는 펠릿의 경우 생산가는 t당 150만원인데 시장가치는 23만원에 불과해서 앞으로도 엄청난 적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겠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연간 적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연간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李浩雄委員**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펠릿 생산이라는 단일방식을 탈피해서 폐비닐을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런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장성과 경제성도 함께 검토해서 해야 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지금까지는 농촌 비닐이 발생되는 것이 물론 추정량입니다. 연간 한 29만t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인 8만5,000t 정도만 수거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습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 발생량 대비 아주 미미한 양, 한 10% 내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비, 운영관리비 수백 억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유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浩雄委員** 그래요. 그렇게 문제인식은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글쎄,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저희가 환경정책평가원에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적으로 바람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저희한테 제시되었습니다.

○**李浩雄委員** 습식처리시설이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게 함께 모색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계획이나 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연구하면서 고민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제안하도록 할 테니까 서면으로 그 폐비닐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억원 예산 책정이 되

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폐비닐처리시설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상세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浩雄委員 대기오염관련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양상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발생 등 개도국형에서 이제 오존이나 질소산화물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기오염측정망은 환경기준물질인 아황산가스 등 일반대기질측정에 치중하여 오존측정기 및 유해대기측정기 등 특수대기측정망 설치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오존수치의 증가가 지난 10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는 95년 2회에서 2000년에는 52회로 5년 동안에 무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개최 시 오존주의보가 발생될 경우에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월드컵을 표방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 예산에 오존측정기 4대 이외에 대기측정기 1대만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존오염은 증가되고 있는데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존에 대한 대비는 결국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오존오염에 대한 측정망확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액대로 배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점차 늘려서 전국에 38대를 설치하고 서울 수도권지역에 8대를 설치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대비해서는 질소산화물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원천이 주로 자동차 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서 운동경기 기간 동안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예, 수고하셨습니다.

金晟祚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委員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작성 및 예산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기본사업비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환경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항목에 기본사업비가 있는데 기본사업비란 어떤 성격의 사업비를 이야기합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환경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투자사업이 아닌 일반경비를 기본사업비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격상은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이것은 기획예산처의 심의없이 우리 장관께서 풀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맞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아닙니다. 심의없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아니고 그러면 기본사업비라 함은 기획예산처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럽게 장관께서 확보할 수 있는……

○環境部長官 金明子 비교적 자연스러운 것은…… 세항별로 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절차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성격상……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투자사업이 아니고 일반경비……

○金晟祚委員 투자사업이 아니고 일반 경비성 성격은 기본사업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기획관리실장, 맞습니까?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예.

○金晟祚委員 대체로 기본사업비 항목 내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 장관께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100선 보급 3억7,500만원이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재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 100선 보급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게 10억이었던가요?

○金晟祚委員 보고서에 보면 대기환경보전항목에

아름다운 소리 100선 보급 등 해 가지고 3억7,500만원이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 포함된 것을 이야기합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98년도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金晟祚委員** 기획된 사업이고 연차사업으로서 계속 시행한다 이것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일단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金晟祚委員** 아니, 된 것이 왜 예산서에 아름다운 소리 100선 보급 등 해서 3억7,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소리를 다 채음이라고 그러나요? 소리를 전국에서 채집을 한 다음에 이것을 선정해서 편집작업을 완료를 한 후에 홍보물로 제작해서 각급 관련단체에 보급하는 것까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 뒷 단계가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 100선 보급 사업이 총 10억이 든다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얼마 정도 계상되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자세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대기보전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아름다운 소리 100선이 대기에 관한 소리입니까?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대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소리나……

○**金晟祚委員** 자연보전국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그것은 대기보전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 소리가 대기에 관련된 소리냐 이겁니다.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그것은 아닙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이게 어떤 소리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무슨 소리든지 다……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주로 자연에서 나오는……

○**金晟祚委員** 그러면 자연보전국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晟祚委員** 아니, 그렇지요. 어디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 뭐 총무국에서 해도 되고 건설부에서 이것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 대기보전국 산하 공무원이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연보전국 산하 관계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 이겁니다.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저희들이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음공해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화벨소리랄지 차임벨소리 같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소음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소음을 없애고 어떤 자연적인 소리로서 우리 생활주변의 소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10억 예산 중 앞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녁식사 시간 전까지 얼마 남았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장관님! 이 아름다운 소리 100가지 녹음해서 보급하는 데 돈 10억을 쓴다고 하면 국민들이, 영등포역 앞에 있는 노숙자한테 물어보면 이것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라져 가는 자연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뜻에서 한번 전국에 있는 모든 소리 가운데……

○**金晟祚委員** 그러면 소리하는 곳은 이 국에서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대기보전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소리 예산이 2000년 예산이 2억1,000만원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이 한 2억1,000만원 정도 되어서 총 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KBS 영상단에서 저희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金晟祚委員** 어쩌면 KBS 자체에서도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대해서 벌써 다 개발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전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도 우리의 지원 일부를 받아서 자기들의 기획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환경부에서 10억 정도 대면 KBS에서는 얼마 정도 댑니까?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에 2억1,0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2억8,000만원 해서 전부 5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KBS에서는 거기에서 각종 인건비랄지 기술지원이랄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KBS에서 돈으로 그것을 계량화했을 것 아닙니까? KBS에서 여기에 돈은 안 냈습니까?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예.

○金晟祚委員 그러면 KBS에 이 돈을 주고 용역 준 것이네요?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용역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본사업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중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에 5억8,100만원을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 5억8,100만원이 변동사항 없이 계속 5억8,100만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이 단체에서 환경부에 요구한 금액이 똑같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晟祚委員 국장이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폐기물자원국장입니다.

요청한 액수는 더 많습니다.

○金晟祚委員 요청한 금액이 해마다 변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8,100만원으로 계속 똑같이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저희로서는 예산이란 것이, 원래 폐기물관련해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은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래서 모든 캠페인이라든지 일반적인 심포지엄이나 행사들을 쓰시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金晟祚委員 됐습니다. 이 쓰시협에 돈을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맞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제가 국감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쓰시협이 유지되고 작동되기 위한 운영비도 지원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도 지원되지요? 그렇지 아니한 단체도 많지요? 벌써 잘 작동되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작동유지비까지 환경부에서 지원해야 될 급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작동유지비라기보다는 원래 쓰시협의 성격이, 대한민국에 각종 환경단체가 26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각의 단체를 상대하기가 상당히 시간도 그렇고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단체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한 30여개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쓰레기문제만을 전담하도록 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주로……

○金晟祚委員 그러면 그 예산을 그 30개 단체가 나누어 갖습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사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사업에 따라서 나누고…… 그러면 사업이 아닌 것은 30개가 연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쓰시협에서 공동으로……

○金晟祚委員 그 30개 업체별로 사업배분된 내역을 저녁식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전국 단위로 만약에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한다면 일선 시·군까지도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일선 시·군에 있는 시민단체나 혹은 사회단체가 훨씬 더 일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양군 등 이 30개 단체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온 나라에 골고루 이것이 홍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劉容泰위원장, 申溪輪간사와 사회교대)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그 30개 단체의 예시를 들면 그 중에서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MCA, YWCA 등 많은 단체들이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지사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영양에 있어요? 봉화에 있어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金晟祚委員 이것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효율성이 가장 좋은 방법

을 찾을 의무가 환경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더 좋은 대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장관님! 전번 환경관리공단 국감 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출연한 환경시설관리공사를 민영화하기로 했고 11월20일까지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끝내기로 했는데 평가 끝냈습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평가 중에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국감자료에 11월20일까지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못했습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그것이 예정일자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고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리고 올해까지 민영화를 끝내겠다고 얘기했지요?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예, 그런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내년 환경관리공단에 지원되는 것 중 시설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시설공사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시설공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곳에만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환경부 예산에서 시설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자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제가 조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영화하는데 종업원 인수방식이 확고합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종업원들에게 이것을 민영화하면서 매각대금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그 매각대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평가전문기관 2개소에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의 내년도 예산서에 이것을 추계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현재로서는 그것을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金晟祚委員 왜 안 잡으셨습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에는 아직까지 민영화의 구체적 방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金晟祚委員 아니, 국감 시에 올해 말까지 민영화하겠다 라고 답변하셨고 적어도 내년 중에 민영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계해서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본래 계획은 내년도 말까지 민영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렇지만 올해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국감에서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감 시 위증했습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 전에 편성이 되어서 그 안을 냈기 때문에 그때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金晟祚委員 민영화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충 62억 정도를 출연했고 재산으로 따지면 자산가치가 육십몇억이 되지요?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얼마에 매각될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못합니까? 3년 정도 62억을 투자해서 운영했는데 얼마정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그 60억을 좀 초과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61억원 이상으로 매각될 것이고 그것이 적어도 환경관리공단 세입에 계상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예, 그럴 때는 저희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산하기관의 예산은 장관님이 검토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金晟祚委員 그렇다면 전 산하기관의 2001년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관리 대책으로 약 2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사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타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항공기 소음을 왜 국민의 혈세로 측정합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지만 항공기 소음관계는 인근의 주거지역 주민들의……

○**金晟祚委員** 일반사업장 옆에도 인근의 주민들이 많아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민원이 있고……

○**金晟祚委員** 민원도 발생합니다. 아니, 일반사업장인 경우에 옆에 사는 주민이 만약에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면 측정장비를 정부에서 사서 그 사업장에 측정망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일반사업장인 경우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장비를 돈으로 장비를 사서 그 사업장 내의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엽적인 문제,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책임을 부담시키가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金晟祚委員** 공항은 광역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지엽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그 소리를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경비를 내야 되고 측정해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왜 환경부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런데 공항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근지역에서 예를 들면 도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오존측정망 설치하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金晟祚委員** 항공기 소음발생원이 공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공항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체킹망을 형성해서 체킹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공항에 이륙하는 그 지역 등등의 어떤 특수지역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기계 한 대로도 얼마든지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통계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뜨는 지역 않는 지역 연중 다 똑같은데 연중 상시 뜨고 않는 것을 다 측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는 규칙적인 정기적인 측정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대기보전국장이 답변드리면 좀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사실 공항에서의 소음은 국내선이나 국제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들에 대해서의 어떤 피해에 관련되는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또는 어느 지역별로 그 소음의 등농도 곡선을 체크를 하고 피해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또 그 지역의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있어서도 공항에 따른……

○**金晟祚委員** 그것이 항시 연중 규칙적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연중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행기의 이착륙시간이나 방향 또 풍향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종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항당국 관제탑과의 협조하에서 계속 측정이 되어야만이 되는 사업입니다.

○**金晟祚委員** 측정망 구축을 위해서 공항에서 돈을 일부 지원받습니까?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공항 스스로의 일부 측정망이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아니, 우리 공항관리공단인가 어디에서……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저희들이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공항은 공항 나름대로 자체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공항에서는 공항 내부만 하고 우리는 공항 외부의 지역에 한하여 하는 것입니까?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주변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金晟祚委員** 공항 외부 주변지역에 상시하고 있습니까?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예, 다 못해 가지고 일부 이동측정기를 사서 하기는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측정망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측정망을 안 해도 한 분이 휴대용 소음측정기로…… 김포공항의 경우에 한 사람이 계속 돌면서 측정을 해도 그것이 3년, 4년은 유효하게 통계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공항측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金晟祚委員** 다음에 저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在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委員**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국장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20001년도 예산을 보면 전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계획 자체를 취소나 축소 조정할 수 있고 환경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한 것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全在姬委員** 그리고 99년12월 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0년8월17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검토대상 계획과 사업이 대폭 늘어 났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그렇습니다.

(申溪輪 간사, 劉容泰 위원장과 사회교대)

○**全在姬委員** 그런데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2억2,800만원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全在姬委員** 이것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엄격히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全在姬委員** 환경부에서 내부검토한 예산으로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인원은 2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全在姬委員**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1억9,700만원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全在姬委員** 그러면 21억9,700만원이 내년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2억2,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킬 생각이십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저희들이 어렵게 법정 제도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전문인력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초년도 예산을 이렇게밖에 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보완적 수단으로 환경부 본부도 그렇게 지방청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을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쪽의 검토 인력을 많이 늘리고 또 지방청마다 주로 지역전문가들 20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검토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입니다. 이 위원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얻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틀림없이 예산 부족이라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문제가 발생해서 사후조치를 하려면 21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이 들 수도 있고, 10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복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全在姬委員** 그렇다면 돈 21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킨다면 도대체 환경부는 사후 뒷처리만 하는 부서입니까,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부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예산 뒷받침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직의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이제 내년도에 첫 해가 될텐데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최선을 다 해서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해보면서 그때 나오는 문제점을 적극 해결한다……

○**全在姬委員** 해보나마나 안 됩니다. 21억이 드는 예산을 지금 2억2,8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얼마나 엉터리인가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검토할 본부의 행정계획이 235건, 지방청이 해야 될 행정계획이 350건, 개발사업이 1,400건입니다. 그 중에 2001년도에 반영된 2억2,800만원을 제가 따져보았더니 전문가의 자문횟수가 880회입니다. 이 880회라는 것은 어떤

것만 자문받고, 어떤 것은 자문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제가 전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개발사업만 하더라도 1,400건인데 자문횟수는 880회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도 2인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다양한데 어떻게 2인이 그 검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검토하는데 검토수당이 5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검토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조사는 880회 중에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380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380회를 간다면 나머지 사업은 못 가는데 최근에 용인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존가치가 있는 녹지를 훼손하여 다시 복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예산을 짠 것 자체가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획예산처에서 이것밖에 못 준다고 그러니까 맞추어서 그냥 2억2,800만원만 갖고 왔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21억을 아낌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관께서는 지금 편성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것이 2억2,800만원밖에 없으니까 되는 대로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국회에서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추가로 확보되어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당분간 전담부서를 설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장관께서 제대로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환노위 소위에서 예산조정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全在姬委員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全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가, 예산이 현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제가 거기에다 하나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劉容泰 나중에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全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15쪽 맨 하단에 보면 폐기물줄이기 생활화 문화정착 이래 가지고 2억원짜리 예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2억을 가지고 텔레비전 광고, 홍보사업…… 신문에 광고 하나 내는데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전지로 광고 한 번 나가는데 2억을 가지고는 1회용도 안 됩니다. TV 스파트광고 한 번 나가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생활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데 돈 2억 갖다놓고는 내가 보기에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지금 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광고를 연간 TV에 죽 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다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부분은 홍보가 중요하니까 증액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위원회안으로 조정할 때 필요한 안을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 다음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금릉의 경우……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가동률이 25%이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리고 현재 방류수가 기존 시설에서 방류되는 것이 질소의 경우 4.0 내지 10.3ppm이고 총인의 경우에는 0.0 내지 0.1ppm으로서 원래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데 왜 고도처리시설을 합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옳습니다. 다만 유입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고농도 폐수배출 업체인 음식료품 업체들이 일부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유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보완시설을 하려는 것은 질소인도 더 잘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난분해성 COD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제지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에 난분해성 COD가 기준이 약 40ppm인데 현재 최고 128ppm까지 COD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분해성 COD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로서는 거의 어렵다고 보

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공사를 하도록 반영했습니다.

○**全在姬委員** 지금 2001년의 가동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지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음식료품 업체들이 입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한 200t 가까이는 될 것으로 봅니다.

○**全在姬委員** 그러면 가동률이 얼마입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때 되어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25%보다는 높은 한 40%까지는 되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리고 그때는 음식료품 제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오는 폐수농도가 짙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예,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 나오는 COD도 지금 방류수 기준이 40ppm인데 현재 최고 128ppm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OD 처리는……

○**全在姬委員**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재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나중에 계수소위에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 남후농공단지인데 지금 오·폐수 발생량이 2001년에 21개 업체가 입주하더라도 1일 단위 219t인데 지금 600t으로 시설용량을 하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과다시설 아닙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일단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러면 축소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예, 그래서 저희도 대체로 농공단지나 산업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입주 업체들이 최대로 자기네들이 경기가 좋을 때 최대생산 기준으로 폐수배출량이 나오더라도 처리가 충분히 되게끔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는 여유있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全在姬委員** 좋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축소하면 좋을까하는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全在姬委員**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어차피 오늘 여기에서는 결론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단 폐수처리장인데 지금 저희들 자료가 환경부에서 국감할 때 준 자료가 다르고 최근에 낸 자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안 칠서, 동광양의 가동률이 저희가 국감할 때에는 2000년도 1/4분기, 2/4분기 평균을 해서 칠서가 10.5%, 동광양이 12.8%였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것은 동광양이 44.5%, 함안 칠서가 26.7%로서 갑자기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지금 10.5%, 12.8% 지적하신 것은 현재 운영되는 시설의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도처리하면서 44%, 26% 낸 것은 동광양의 경우에 현재 7,000t인데 저희가 시설규모를 2,600t으로 이번에 고도처리를 하면서 축소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600t으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열용량을 고도처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처리 용량까지 합치면 실제 7,000t이 2,600t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 줄어드는 2,600t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44.5%라는 뜻입니다.

○**全在姬委員** 함안 칠서는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함안 칠서도 저희가 현재 3만t 규모인데 과도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고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1만5,000t으로 저희가 축소조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고도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축소조정되는 향후의 그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라는 뜻입니다.

○**全在姬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안 칠서의 경우에는 가동률이 26.7%입니다. 그렇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그 다음에 질소와 인의 방류수질도 제가 볼 때에는 기준 내에 있는데 함안 칠서에다가 고도처리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질소는 총 질소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고농도 질소폐수 배출업체인 한일합섬이 배출량이 6,000t 됩니다. 현재 한 4,000t 되는데 거기에 6,000t 되는 것이 입주하고 이럴 경우에 총 질소의 그 배출수준이 약 한 200pp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주하면 양

도 늘어나고 총 질소도 200ppm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는 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추가적인 고도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全在姬委員 한일합섬의 6,000t을 지금 감안해 가지고 26.7%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리고 현재로서는 하여튼 둘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함안, 칠서는 TN이 평균 17.1ppm TP가 1.8ppm으로 방류기준 25ppm과 4ppm에 미달하고 있는데 한일합섬이 추가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돈을 무계획적으로 써서는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제대로 효율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을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가로 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의욕적으로만 하지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이 부분은 위원님도 저희 자료제출 과정에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물금·매리 상류에 바로 함안 칠서 농공단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 당시에도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이 공단이 들어섰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입량이 그동안에 계획량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소가 200ppm짜리 6,000t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全在姬委員 제 자신으로서는 26.7% 밖에 가동이 안 되는 시설에다가……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한일합섬이 6,000t이 들어오면……

○全在姬委員 현재는 10.5%입니다.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t에 2,600t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1만5,000t으로 축소조정할 경우에 2,600t이면 조금 늘어나는데 26% 정도 되는데 한일합섬의 6,000t이 들어오면 1만t정도 되어서 앞으로 내년 말에는 계획대로 된다면 1만5,000t 중에서 1만t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全在姬委員 지금 답변하신 것 내년에 국정감사에서 어그러지면 국장님 사표 내고 나가시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全在姬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수조정소위원회 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장·군산산업단지 이것을 지금 3만t으로 했었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지금 전부다 입주한다고 지금 해 놓은 업체가 1만6,367t인데 이것도 지금 3만t하고 1만6,000t하고는 거의 계산해 보면 턱없이 적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全在姬委員 그래서 총 218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21억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도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지금 기준시점이 어디까지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 기준하면 1만6,000t정도입니다마는 지금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입주하는 시설들을 생각하면 2만5,000t에서 2만9,000t 정도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쪼개서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3만t을 할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까지 단기적으로 1만6,000t 나오는 것만 한 2만t 정도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저희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예산배정이 되면 이것은 정확하게 실시설계 때 한 번 해보아야 그것을 단계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번에 여유있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全在姬委員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 300t 규모로 하더라도 150t, 150t 두 개로 하는 방법이 있고 300t을 한 개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쓸데없이 2만t만 하면

될 것을 3만t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국장님 돈이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못 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경남 통영 안정 국가산업단지, 거기는 원래 사업 시행자가 한국가스공사와 (주)대우로서 86만평 중 가스공사가 40만평, 대우가 46만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우는 주식회사 대우의 자회사가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예,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런데 지금 대우 자회사가 옮겨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全在姬委員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거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全在姬委員 그렇다면 폐수종말처리장 1일 5,700t의 설치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5,700t을 요구했지만 여기에 1단계로 2,700t에 대해서만 시설하고 나중에 5,700t이 될 때에는 3,000t은 추가로 하기로 하고 우선 2,700t만 하게 됩니다.

○全在姬委員 그러면 왜 예산편성은 2,700t으로 계상 안 하고 5,700t으로 하셨습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700t에 대한 예산만 한 것으로……

○全在姬委員 다시 예산을 확인하셔서 2,700t이라든지 꼭 필요한 양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것은 이미 줄였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全在姬委員 경기도 파주 금파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입주가 용이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지조성을 막 끝낸 상태이고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2월쯤 분양공고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율이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8억원을 반영해 놓았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예,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이것은 별 걱정 안 하십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위원님 말씀대로 총 계획은 6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개 업체만 일단 계획에 되어 있고, 분양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사실은 전체 부지 면적의 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t 정도 소규모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 6개 업체가 입주되면 얼마나 폐수량이 발생할지 사실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정확히는 예측 안 되고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1개 업체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지금 거기서도 부지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자동차부품 재활용업체인데 지금 자치단체인 파주군 자체에서는 전체 합쳐서 600t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지만, 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반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지 정확한 것은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6월까지 가동되는데 지장은 없도록 해주어야지 그 전에 안 되면 폐수가 그냥 무단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600t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나갑니다마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입주하려는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그 용량을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제가 환경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수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농공단지폐수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예 가동이 안 되거나 가동률이 형편없이 낮거나 가동효율이 엄청나게 낮은 것은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진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졌습니까?

국장님 오늘 여기에서 근무하시다가 인사이동되어서 후에 다른 국장이 와서 그 문제가 지적되면 국장님이 그 부분까지 책임집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올해 새로 시작하는 신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에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입주업체들이 충분히 계획대로 입주할 경우의 예상배출량을 여유를 두고 산정하기 때문에 입주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과다산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나 감안해 주시고 도와 주셔야 할 부분은 일단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은 업체가 입주하기 전 단계에서 설치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全在姬委員** 그것은 압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향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이 있을 때 그것이 결정되었다, 그것이 몇 년 후에 가동률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면 환경부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제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글쎄요, 그런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좋은 뜻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그렇게 또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은데 혼자서 결정해서 혼자서 추진해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관련 주체가 많고, 사실은 주체라고 할 것이 지자체이고 그것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는 형편에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에는 또 그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할까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맡은 이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 범위 내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자기가 재직시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책임지는 제도가 되지 않고는 이 나라의 총체적 난국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진정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퇴직하든 다른 부서로 전직이 되었더라도 책임진다고 하면 국장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申溪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溪輪委員**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2001년 예산을 보니까 환경부로서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분야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이 빠져 있는 것도 무척 많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립니다.

먼저 굴뚝원격감시체계와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TMS부분에 작년에는 약 41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더 늘어나서 65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중부권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이 시스템에서 측정된 수치와 그 이후에 사람이 가서 다시 시료측정해서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실례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감에서는 TMS상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랬지요?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예, 그때 기준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러면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측정이 내가 보기에는 그 반대인 것 같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65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0년 운영에 의한 평가와 정비, 방금 말씀하신 정도 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요인이 없습니까? 또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에요.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그 관계는 지난번에 나왔던 자료는 사실 굴뚝 TMS 측정했을 때 동일시간내에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동일시간이 아닌 수작업측정을 했을 때 그 수치하고 TMS에서의 가장 높은 수치하고 비교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권장만 했었지 TMS에서 나오는 수치를 어떤 공인된 법적 기준치로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은 상대정확도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손으로 표준시료를 넣어 가지고 실험실에서 측정한 수치하고 그 TMS가 실제로 측정한 수치하고의 일치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 계속 권장했습니다마는 일부 안 되는 데도 있었고 그것이 권장사항이어서 특별히 벌칙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2년부터는 그것을 법제화하면서, 지금 여천같은 경우에 금년……

○申溪輪委員 아니, 국장께서 제 질의 15분 중에서 한 4분을 쓰셨는데 지금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느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環境部大氣保全局長 朴大文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래서 문제없으면 문제없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이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께 꼭 제가 1년 내내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본 것과 제가 본 방법에 의하면 지금 틀린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지적할 테니까 그 답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65억7,000만원이 하나도 문제없이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장관님, 지금 환경부 산하에 공단과 공사가 셋입니까, 넷 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8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넷이 됐습니다.

○申溪輪委員 오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나오셨고, 환경관리공단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재생공사사장님 나오셨고 세 분 다 나오셨나요? 다 나오셨지요?

세 분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공공부문에 대해서 노사문제가 있고 해서 복잡한데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 중간정산 비용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나요?

○國立公園管理公團理事長 金世鈺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는 어떻게 됐나요?

○韓國資源再生公社社長 吳亨根 저희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申溪輪委員 반영을 전혀 못했나요? 환경관리공단은 어떻습니까?

○環境管理公團理事長 黃弘錫 중간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申溪輪委員 장관님, 이것은 불평등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보니까 대부분 다 정산이 됐어요. 환경부에 세 개 공단이 있는데 하나는 됐고 두 개는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전체적으로 전부 되게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래 가지고 공단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국감 때 전부 따져봤어요. 같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데 101%, 원하는 대로 다 해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돈 한푼도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해준 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기관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같은 부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점검해서 장관이 앞장서서 각종 회의에서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면 제 말에 잘못된 것이 있나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글쎄요, 일단은 기관장 책임하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申溪輪委員 지금 노사 문제가 심상치 않고 각 공공부문에 노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도 부족할 판에 없으면 더욱 곤란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가 예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챙겨보시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입니다.

이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드린 질의인데 폐광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전국 휴광산·폐광산이 894개, 그 중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곳이 158개라고 했는데 계획에 의하면 97년부터 매년 10개씩 정밀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작년 22억에서 올해는 15억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3개소에 15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80% 정도의 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커서 회피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더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잘 조사해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밀 조사를 못한 곳이 계속 남아 있는 한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환기시키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농림부가 지원한 액수와 환경부가 지원한 액수의 차이에 대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얘기한 것이 있나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작년에 제가 와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조정하려고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환경부의 조건이 좀 불리하다보니까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신청을 적게 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기준보조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그간 수차 협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요청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하는 회신을 작년 10월12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받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이 되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申溪輪委員** 기획예산처에서 환경부에 준 공문이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한번 따져볼게요.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오늘 내일 사이에 바로 좀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로 다 나누어진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산지원까지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조사가 늦어진다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95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올해 지원하고 있는 두 개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한 것과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전액 국고보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같은 사업이라면 같이 전액 국고보조로 하든가 아니면 통일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국고보조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이 예산배분의 원칙인 관계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환경부에서는 추진했는데 그런 원칙 때문에 잘 관철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올해 60억원은 일부는 전액 국고보조지원금이고 일부는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금 이렇게 되겠네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설계비는 전액 국고지원이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30%, 융자 20% 선에서 일단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이 문제도 과제로 갖고 가셔서 통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자료 보니까 낙동강수계 강변여과수개발사업에 총 2,501억원 정도의 국고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재원확보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잘 이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도 충실히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정부 내의 문제인데 지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예산 보니까 환경부 예산도 되어 있고 또 농림부도 예산이 비슷한 경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투자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이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로 굳이 차이를 나눈다면 암반관정개발사업과 환경부에서의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현실을 볼 때 이중화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림부 암반관정사업을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일원화해야 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국무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계속 제도개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申溪輪委員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마 암반관정이 사실상 간이상수도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충실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申溪輪委員 그 다음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이것 정말 예산 다 깎일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대안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예산이 신규시설이 1개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많은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보는 것은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텐데 그래서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환경부에서는 연구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어요. 지금 거의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전체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인정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융자해 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해서 대안마련에 신중하게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G-7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끝나는 G-7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나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매년 평가가 누적이 된 게 있고요, 총괄사업으로서 끝나는 것은 내년도이기 때문에 내후년도쯤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申溪輪委員 내후년도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 평가를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성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예산 보니까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약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또 이 계획서 보면 향후 약 1조원의 돈을 투자한다고 계획으로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G-7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G-7사업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G-7사업의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 앞으로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신뢰를 담보할 수 있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G-7 환경공학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남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잘 좀 연구해서 평가를 앞당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두시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관리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金文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환경부 예산은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삭감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오히려 증액을 한다든지 이만큼 우리 위원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가의 부채가 워낙 많고 민생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 에 장관님의 작은 판공비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아껴 살지 않으면 어려운 때에 왔다고 생각되어서 저도 불가피하게 몇 가지 꼭 삭감해야 될 항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 깎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깎아야 안 되겠느냐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줄여서 제시를 했는데 몇 가지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유보 한 번 했다가 다시 통과 안 된 법이고 국회에 얼마 전에 제출 했네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회에 법안 제출도 하지 않고 예산을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태계보전협력금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을 지금 내 놓았는데 예산처하고 협의한 이후에 며칠 전에 제출한 법안인데 이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내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

을 전제로 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 29억5,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대로 한다면 2001년1월1일부터 100억원 정도의 협력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제출도 안 한 상태에서 법 개정을 예상하고 이미 29억5,400만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도나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이 제도에 대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라고 그럴까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과정을 밟다 보니까 일정상 지금 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보전협력……

○金文洙委員 가만, 되었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는 제가 죽 읽어 보니까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개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제출할 계획이니 그 예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것이 국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일전에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게 타 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을 개정해서 건축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업자들에게 허가취득시한을 3년 연장해 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며칠 뒤에 다시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를 다른 부처에서 못 보았습니다. 통과가 안 된 법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장관님은 유감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회의 기능 또는 권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알고 법을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도 틀려버리고 법도 틀려버리고 둘 다 차질이 빚어져서 행정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사실상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유역 하수처리시설 6개소의 설치지원금이 13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동강유역 하수처리시설 133억원은 사업의 진도를 보면서 지원해야 될 것인데 2000년까지 기존투자된 3,867억원 중 집행액이 불과 3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33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시간도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정치적 고려가 어떻다느니 하는 것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야기해 나갑시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낙동강 물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초기인 97년, 98년도에 사업지역을 바꾸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金文洙委員 어쨌든 현재 이월되는 예산이 대체로 1,800억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지요? 이것은 제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1,439억원 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金文洙委員 그러면 그것이 이월될 것이고 내년에 다 못 쓸 것이 거의 명백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133억원을 더 밀어줍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런데 금년 말까지 1,500억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것 다 못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아니오, 1,500억원 정도가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1,400억원이 내년도에 집행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래서 내년에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133억원을 집행해도 전혀 늦을 바가 없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추경으로요?

○金文洙委員 추경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10월10일 현재까지 집행액이 32.8%밖에 안 되잖아요? 1년 예산 총액 2,808억3,200만원 중에서 32.8%, 921억만 10월10일까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더 주자, 10개월 동안 32%밖에 못했는데 내년에 또 돈을 더 주자…… 안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제가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자료인지는……

○金文洙委員 주신 자료 그대로이고 이것 보시고……

○環境部長官 金明子 10월 말 현재는 그런데 2000년도 말로 치면 1,500억원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金文洙委員 아니, 어떻게 10월10일까지 안 하던 것을 불과 1달20일만에 50% 이상 집행해 버린다고요? 이것 번갯불에 돈 막 구워먹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설치예산에 대해서는 金樂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비축시설 등 130억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환경부가 농촌 폐비닐 습식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시멘트 킬른의 연료 또는 원료화처리방식으로 변경을 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런 셈이지요.

○金文洙委員 그런 셈이 아니라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런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金文洙委員 시도가 아니라 그 방침이 확고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저는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시멘트 킬른의 연료 또는 원료화하는 자체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기존 습식방식으로 처리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을 그대로 시멘트 킬른의 연료, 원료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지는 이 중에 농촌 폐비닐 습식처리시설 설치비용 66억원 대신 폐비닐 간이처리 압축보관시설, 소각위탁처리비용 등 합쳐서 60억3,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66억 빼기 60억3,000만원 하면 5억7,000만원의 예산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두 번째로 기존의 간이처리 압축보관시설 1만5,000t이 있는데 또 1만t씩 3기의 신규처리시설을 만드는데 52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간이처리 압축보관시설, 즉 전처리시설 1만5,000t분이면 1만t 용량의 소각시설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3기 52억5,000만원은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총 58억2,100만원 삭감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시설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전환할 때에는 충분히 검증해 보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환경부 자체를 위해서도 좋다는 것인데 장관님, 특별히 이의가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

○金文洙委員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답이 와서 입증되기 전까지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킬 것이니까 그점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2000년6월5일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것을 지시하시고 지금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이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것의 예산인 6억9,700만원이 환경부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제상 옳지 않다고 보아서 전액 삭감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것이 옳습니다.

흔히 노사정위원회도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노동부 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을 안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사정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것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위원장도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지만 환경하고도 상관없는 분이고 나머지 당연직 위원에 진념 재경부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돈을 환경부에 가지고 와서 무슨 환경예산을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적합치 않다 따라서 이 예산 6억9,700만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하실 말씀있으세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여러 부처로…… 개발부처와 보전부처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원으로 들어 있고 민간위원이 들어 있지만 그 성격은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처가 환경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예산편성을 보면 관계부처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부에

예산이 들어 있고 반부패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 들어 있고 제2건국의 경우는 행자부에 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것은 이해를 하고 내가 노사정위원회도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면을 보니까 구성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 NG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陳 捻 장관이 무슨 환경 NGO에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아니오. 정부 개발부처 장관들하고 민간위원 면면을 보셔야지요.

○**金文洙委員** 陳 捻, 李廷彬 외교부장관, 崔仁基, 徐廷旭, 金한길, 韓甲洙, 辛國煥, 金明子, 金允起, 盧武鉉, 田允喆, 安炳禹, 崔圭鶴 이 장관님들인데 여기에서 장관님 비중이 여럿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민간위원들을 좀 보셔야지요.

○**金文洙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대통령실로 하는 것이 예산편제상 맞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환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을……

○**金文洙委員** 그러면 그 편제를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돈을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대는 것은 환경부에서 예산대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노동부가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달라요. 그러면 환경부가 실지로 주도를 하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드릴 수 있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부에서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이 구성을 보세요. 이것 환경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다음 물절약 시책 10억원인데 작년에 2억 4,179만원으로 물의 날 행사해서 장관님 개인적으로 의혹도 받으시고 실제 행사의 성과도 없다 이래서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나라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전시성 행사인 2001년도의 물의 날 행사 비용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어떠세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저는 환경부가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행사로서 물의 날 행사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이 2억보다 훨씬 컸다고 자부를 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그것은 장관님 혼자의 생각이시고 환경부 직원들한테 물어 보시거나 밖에 물어 보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 99년 3년동안에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장관님이 작년에 하심으로써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주장을 하시면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깊이 숙고하셔서 이 행사 자체로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전시성 행사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에 있어서 특히 환경부문에서 공급위주의 정책이 수요관리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왜 물의 날 행사를 장관님의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낙찰을 시켰어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온당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金文洙委員** 이것 때문에 의혹이 있었고, 96년, 97년, 98년 연속 안 하던 행사를 부활한 것이 장관님 개인적인 관계때문에 그렇다고 말이 많은 것을 모르세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런 시각으로 사물을 본다고 그러면 아마 세상에 제대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은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못 들으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 소리를 듣고 여론에 귀를 기울이셔야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을 하시지. 의혹이 있는 일을 자꾸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또 다른 장관들이 하던 행사를 폐지한 것인데, 살려가지고 실지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시고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실지 방법이 없잖아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다음에 金晟祚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소리는 이것은 KBS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2억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金樂冀委員 잠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폐기물자원국장님, 아까 자꾸 혼돈해서 엉뚱한 답변을 해서 그것을 재확인을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각장건립 예산이 98년 103억, 99년 143억, 올해 78억원 등 매년 미집행액이 발생했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그 비율만큼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야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다른 예산도 그러하지만 일단 소각예산 확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선지원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 내년에 삭감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자체가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金樂冀委員 소각장이 전부 신규사업이에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있고 기존사업이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기존사업 중에서 공사중단 된 곳은?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기존사업 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16개소가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것은 내가 물을 테니까 거기까지 답변할 것 없고, 이것을 그 비율만큼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16개 중에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은 삭감을 해도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樂冀委員 그리고 아까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공사가 중단된 16개 지역 가운데 밀양, 마산, 청주, 춘천, 대전 등 다섯 곳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공사가 재개된다는 뜻이지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11개 지역에 지원된 예산은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11개 지역 중에서 현재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대구의 칠곡하고 경기도의 화성인데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독려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두 군데는 환수조치하는 것입니까?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환수조치할 것을 뭐 하러 예산에다 계상했어요? 정부가 예산확보를 한 푼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데 깍아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동의는 내가 국회의원 몇 년 했어도 처음 듣습니다.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高在永 죄송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됐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1차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매년 예산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설명이 끝난 후에 당 위원회의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전문위원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예산안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물론 위원들을 위해서 작성도 하지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행정부에 대해서도 촉구 내지는 지적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나 해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사항 중에 申溪輪 위원님, 金文洙 위원님, 기타 한두 분께서 유사한 지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이 검토보고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이나 배경이나 이유를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 보고 내지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뿐이 아니라 각 위원회가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될 절차인

데 그것이 생략되는 것은 위원회마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다 기록을 하고 계실테니까 나중에 기획관리실장 또는 담당국장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쯤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본다면 9쪽에 보면 폐기물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지적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조정 필요성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물쓰레기와 서양 사람들의 음식물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쓰레기의 종류가 다르다, 우리는 수분이 많고 염도가 문제이고 또 외국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과정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지적된 부분이 염분과 그리고 습도, 또 염분이 많이 섞여져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최종처리가 사료로 쓰여지는 경우 또 퇴비로 활용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지적을 했고, 사료로 활용되는데 있어서는 광우병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염도가 많은 음식물쓰레기로부터 나오는 퇴비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땅에 매설을 하든지 또는 비료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 염도가 축적이 되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후에도 정부가 자료를 통해서 준 것을 보면 퇴비로 생산된 그 부산물이 판로가 어디로 가며, 그것이 최종적으로 쓰여지는 곳이 어디이며,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연간 총생산량은 얼마이고 적어도 1% 이상 3% 가까운 염도를 가지고 있는 이 음식물쓰레기의 퇴비가 엄청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고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그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퇴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전혀 간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가 철저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다시 한번 챙겨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14쪽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체제 정비 필요성 해가지고 아까 제가 알기로는 金晟祚 위원께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총체적으로 얼마이며 그 단체가 받는 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또 그것을 당연히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기금이든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그 액수가 많든 적든 불문하고 반드시 평가하기 위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 동안 그 단체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디에다 어떻게 썼으며, 그 성과가 과연 얼마만큼 거양이 되었다고 환경부가 평가하는지, 특히 그와 관련해서 환경민간단체진흥회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지적이 나와 있는데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이것은 과연 어떤 성격의 단체이며 법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申溪輪 위원께서 아까 G-7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G-7사업을 환경부가 2001년도에 마무리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아까 환경부가 하셨는데 G-7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내년 말이 지난 다음에 하시더라도 그간에 사업별로는 아마 이미 완료된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별로 보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한 사례를 이삼 년씩 묵혀 가지고 2001년 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그때 어떤 새로운 보강책이나 개선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한 예를 들면 폐기물사업 중에서 G-7프로젝트로 환경부가 지원해서, 아마 폐기물국장한테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패트병을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재활용 사업을 G-7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환경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람이 상당한 양의 재정을 출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환경부가 적극 지원하고 돈까지 주어서 만든 그 사업이 원료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공장의 가동률이 30% 미만입니다. 그 패트병은 4년 전만 하더라도 골치아픈 폐기물이었으나 이제는 자원으로서 활용되다 보니까 국내 여러 산업체들이 그것을 재활용하고 또 일부는 그것을 중국, 기타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만약에 환경부가 그와 관련해서 의지가 있었다

면, 또 자신들이 적극 권장하고 재정지원까지 해서 만든 G-7프로젝트라고 하면 자원재생공사가 전국적으로 수집하는 패트병을 비싼 값에 팔아서 장사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 사업체에 환경부 산하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만이라도 그 수집된 원료를 외국으로 팔아서 국내자원이 고갈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공장이 G-7프로젝트에 관련된 업체가 그것을 활용해서 원자재로서 쓰면서 공장가동률을 높여갔을 때 G-7프로젝트의 효과도 고양하면서 또 한편 원료를 보급해 주는 그런 원활한 협조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원재생공사 사장이 앉아 계신데 패트병을 연간 얼마 받아서 지금 외국에 얼마나 수출하고, 지금 현재 몇 개 업체에다가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연간 총 얼마나 걷힙니까?

○韓國資源再生公社社長 吳亨根 패트병은 경제성이 아주 좋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선호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하지 않고 거의 민간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교통이 나빠서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그런 데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그래서 환경부는 자원재생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그 원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패트병을 적어도 G-7프로젝트로 만드는 그 공장에 원료로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그 공장을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해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민간인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아까 全在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한 국장이, 한 과장이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보직이 바뀜으로 해서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환경부가 정부가 그 정책을 결정했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든 직원이 바뀌든 관계관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함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재단법인 환경기술진흥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작년 9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에 이와 관련된 환경기술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법정단체로 환경기술진흥원을 만들도록 법안 초안에 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노위원회에서는 이미 법정단체로 법안에 삽입을 했으나 법사위에 가서 그것이 누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원회에서 왜 그것을 누락을 시켰으며 또 이제 뒤늦게 왜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법에서는 빠진 것을 또 그것을 정부가 양해한 것을 재단법인으로 새로 발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그 단체가 G-7프로젝트를 포함한 기술적인 연구사업을 앞으로 맡아서 적어도 민간 재단법인이 정부의 용역사업을 관장하도록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상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장관께서 조정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약분이 아닌 전체 검토보고 원문에 보면 여기에 72쪽에 민간 환경단체의 지원현황해 가지고 여러 개의 환경단체가 쭉 있는데 연간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이 단체를 보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98년도 이후에 매년 8억 내지 5억 이상의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도 일부 아마 재정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감사와 또 이 단체들이 활동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과연 환경부로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개 단체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정확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연계작업을 했을 때 이 단체들이 좀더 명실상부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金晟祚 위원님께서는 이외에도 NGO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환경부소관의 본예산을 포함한 기금부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정부로서 NGO들을 통해서 정부가 거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에 협조 내지는 협조기관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는 좀더 정확하고 엄격한 감사와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주시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활동이 원활할 때 물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원활하게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거기에 따르는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 거기에 따르는 피해성 여부에 대한 원내 의원 여러분들의 의구심도 있다는 것을 함께 지적을 하면서 원활한 환경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鄭宇澤 위원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두 번째 질의를 하시도록 배정을 했었는데 안 계신 위원님을 후순위로 돌리다 보니까 鄭宇澤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宇澤委員 죄송합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예산소위도 개최한다고 해서 저는 서면질의로 하고 그 내용은 우리 韓明淑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감사합니다.

그러면 全在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全在姬委員 예, 제가 아까 시간에 쫓겨서, 지적하는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부예산 전체에 대한 총평을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환경예산 중에 자연보전부분이 5.65%인 797억원이고 그러니까 기술개발비 604억원하고 자연보전부분 797억원을 빼고는 대부분의 예산이 이미 문제가 발생한 오염물질의 사후적 처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어서 우리 환경부예산이 큰 틀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환경 보전부분에 대한 투자는 사후시설 이상으로 중요한데 너무 적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적어도 2002년도 편성에서는 시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예산은 낙동강하수처리시설은 金文洙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해서 저는 133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당 특별대책지역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지방양여금 부족분을 300억씩 지원하고 있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2000년도에도 총 300억 중 132억9,500만원만이 집행되고 4/4분기 예산 166억원 이것도 11월22일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2001년도 예산 300억원에 대해서는 이 집행여부를 보아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뭐냐하면 환경부예산 전체의 46.2%가 물관리 예산인데요, 전부 지표수 물관리만 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지하수 이용이 정말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도 장관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2001년도 환경부 예산을 보면 지하수에 대한 예산은 고려밖에 있습니다.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정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폐기물 매립지, 지하유류 저장탱크, 지하 정화조 등 지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 현황과 지하수질에 대한 자료를 정보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환경부가 지하수질관리정보화체계구축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금년도에 15억원 신청하셨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全在姬委員 전액 삭감되셨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全在姬委員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실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상임위에서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다른 조정하는 예산을 환경부가 다시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반영해야 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21억, 지하수 관리를 위한 것 15억이 될지 15억보다 더 필요하면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환경부의 구체적인 의견을 저희들 예산심의를 위한 계수소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질보전양여금이 朴仁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조1,254억원입니다. 이것은 환경

부에서 전적으로 편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전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자위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 받아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委員長 劉容泰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全在姬委員 나머지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金晟祚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委員 전번에 국감 시에 제가 지적했었는데 하수도관련 사업의 민자유치사업이 민자가 투자되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내년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계상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環境部上下水道局長 南宮垠 상하수도국장입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하수도사업 민자투자가 총 1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한 3년 되었지요?

○環境部上下水道局長 南宮垠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그것은 3년 동안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살아 있습니까?

○環境部上下水道局長 南宮垠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그것 외에 또 추가로 16개를 더 합니까?

○環境部上下水道局長 南宮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金晟祚委員 아니요, 민자유치사업이 16개소에 대해서 3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계속 해오고 있는 이것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까지도 2001년도 예산에 더 넣느냐 이것입니다.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기획관리실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晟祚委員 예.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민자유치 사업은 정부재정에서 직접 당해 연도에 지원이 곤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지방양여금으로 차후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晟祚委員 그 예산이 잡혀 있느냐 이것입니다.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예산이 안 잡혀져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오면 그것 가지고 검토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자치단체가 얼마 만큼 어떻게 신청을 해오느냐 하는 것이……

○金晟祚委員 아니요, 지금까지……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해 온 것은 16개 사업에 대해서……

○金晟祚委員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그 예산 서 있는데 비해서 2001년도에 예산이 또 더 섰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관하여……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2001년도에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16개가 살아 있습니까?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그 16개 사업 중에서 올해 지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민자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계상을 해놓았지만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일어나지 아니할 경우에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한다, 맞지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민자로 유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예산으로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지방비하고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민자유치는 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 중앙정부 예산으로는……

○金晟祚委員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메칭펀드로서 국비와 지방비 포션이 있는데 그 포션 중에서 국비는 지원해 주고 지방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를 선택해서 민간업자가 우선 사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 상환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 맞잖아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예,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앞으로 계획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예,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이 서 있는 16개 사업 중에서 몇 개의 사업을 올해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냐, 몇 % 정도 이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추정하느냐 그것입니다.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沈在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朴赫圭 위원님께서 성서공단의 저류조에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이 저류조가 낙동강 물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계획을 잡았고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의 질의와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강변여과수개발사업에 관해서도 낙동강물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서 전액 국비라든가 혹은 국비지원 포션분에 대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많이 주었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동강물관리대책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신뢰를 쌓지 못할 경우에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등을 통해서 상·하류간의 협의를 통해서 오염 총량이라든가 수자원 배분 등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될 환경부의 권위를 심히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약속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은 할 텐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렇다면 낙동강수계물관리특별법과 관련하여 지금 벌써 광역자치단체 정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어떤 정도로 제정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자금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될 부분 중 얼마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약속을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되겠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본다면 낙동강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을 근거로 하는 예산안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金晟祚委員 장관님 그러면 그 약속은 낙동강수질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이것을 약속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물론 낙동강특별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법하고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金晟祚委員 저는 낙동강 수질대책에 대해서 장관님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약속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낙동강수계특별법과 관련하여 약속하였던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그 말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특별법을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이 된 내용인데 지금……

○金晟祚委員 그런데 아까 金文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법안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이런 의미의 대답을 방금 하셨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래서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근거나 비용부담의 주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계속 부담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金晟祚委員 장관님, 이것이 법 통과를 전제로 했거나 혹시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완충저류조같은 것은 지금 낙동강특별법에 들어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金晟祚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법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하되 국비를 얼마 지원하고 지방비를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약속한 것 아니에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비율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이 된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들의 근거는 법적으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중요성, 낙동강 대책을 마련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합의가 도출되었는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원안대로 예산이……

○金晟祚委員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예산지원 배분에 대해서 협의한 바나 약속한 바가 없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 쪽이랑은 합의를 도출한 것인데 예산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배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金晟祚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폐광지역 오염대책에 있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비해 볼 때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장관님의 직권으로 국비 지원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제 직권이 아니고 기획예산처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金晟祚委員** 아니 제 이야기는 이런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몇 %, 몇 %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혹은 그 규정을 장관님 임의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金晟祚委員**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긴 명칭이 있는데 보조금관리법시행령 그것을 개정해야 합니다.

○**金晟祚委員**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네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국감과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金晟祚委員** 우리 상임위원회와 환경부장관의 힘으로서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아니요.

○**金晟祚委員** 그러면 국비 지원의 포션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늘리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서 시행령을 고쳐야만 가능한 것이네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金晟祚委員**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되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거기 가기 전까지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金晟祚 위원님, 그렇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요망, 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관께서 정부 쪽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실 수 있는 길은 있지요?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金晟祚委員** 지금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환경부, 산자부, 행자부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것을……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을 각 부처에다가 하는데 환경부의 경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金晟祚委員** 무능한 시장, 군수나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시장, 군수라도 다른 데 가서 돈 받지 여기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시민들이 알면 시장 쫓아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강수계물관리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서 4대강수계물관리특별법을 다 제정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관리부담금 등을 고려해서 지하수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하수관련 부처가 5개 부처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지하수법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로서도 수질관리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하수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니까 그 수계의 물을 이용하면 사용부담료를 거의 물값과 비슷한 70% 정도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 물값의 30%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t당 100원 정도……

○**金晟祚委員** 물값은 t당 300원 입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는 지하수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큰 강 수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사용 부담료를 부과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것은 건교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金晟祚委員** 어쩌면 이 법을 제정할 시 낙동강 수계 근처를 지나는 지하수는 낙동강 수계로 포함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변여과수라는 것이 뭡니까? 낙동강 강변을 조

금 벗어나서 자연 여과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수변지역을 지난 그것을 여과된 것으로 봅니까? 여과를 무엇으로 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모래톱을 여과시스템으로 이용해서 관정을 박아서 빼내는 것입니다.

○金晟祚委員 토질을 이용한 여과를 말하는 것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金晟祚委員 그 옆을 팠을 경우 그 물은 낙동강 물로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지하수 하고 지표수 하고 여과 둑을 통과한 물이 법적으로 같은지 틀린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수에는 물이용부담금이 안 매겨져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국장이 답변하세요.

○金晟祚委員 여과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과할 수 있는 둑을 통과해서 나왔다,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낙동강 물로 보느냐 지하수로 보느냐 지표수로 보느냐 그것입니다.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강변여과수의 경우는 지하수로는 안 봅니다.

○金晟祚委員 지표수로 봅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지표수로 본다기보다는 거기서 제방 안의 하천 부지 내의 지하에서 깨끗한 물을 뽑는 것인데 아주 지하수는 아니고 한 번 여과된 물인데 그것을 수돗물로 공급할 경우 수돗물 소비자한테 물이용부담금을 매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한강 주변의 둑을 넘어서 둑 위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대형 저수지를 팠다 그러면 물이 자연 여과되어서 그쪽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생수의 경우라든지 일부 음료수의 경우 지하수를 활용해서 할 경우에는 그 수질개선부담금을 음용수관리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하수개발……

○金晟祚委員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을 만들 때 한강수계의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자원의 사용자에 대해서 부담료를 매기는 것이 당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과수 같은 경우에 매겨야 되지요? 낙동강수계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강변여과수를 통과한 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물부담금을 부과시키겠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만약에 낙동강둑 바로 밖에서 이와 똑같은 설비를 해서 물을 사용하는 원예업을 하는 사람이나 목장을 하는 사람이나 대규모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물부담금 냅니까, 못 냅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현재 지역과의 합의가 수돗물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돗물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일단 부담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렇다면 수돗물 사용자에게 돈을 거두자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이나 한강 등 그 수계의 물을 소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매기자 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이므로…… 그것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물을 빼서 수돗물로 사용했다고 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든 모든 비용을 이 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자에게 골고루 걷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돗물만 아니라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내는 부담의 경우에 어떤 원칙만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자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리고 한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물부담금 700억원을 상수도 수원지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예.

○金晟祚委員 그런데 그 상수도 수원지에 사는 주민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죄송합니다. 특별대책지역도 있고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晟祚委員 그 7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금년도에 집행하

는 것은 자치단체하고 다 협의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내년 예산에 700억원 정도를 주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한강수계를 통과하는 광역자치단체와 환경부장관이 협의해서……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총액 700억원은 다 확정되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700억원이 아마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도대체 몇 명이 사는데 700억원이라는 돈을, 어쩌면 년년이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부담액을 더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700억원 다 못 쓰고 나중에……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아닙니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7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지출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만들 때 팔당지역주민 상·하류간에 그 규모에 대해서 대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700억원이 나가게 됩니다.

○**金晟祚委員** 매년 700억원입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현재 당분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매년 그것은 700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정률이 아니고 정액입니까?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예,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하나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 그 700억원 중에는 주변 기초자치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하수처리장건설비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環境部水質保全局長 李圭用**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알았어요.

金文洙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金文洙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계획인 세계대기환경학회 주관의 제12차 대기보전세계대회 경비 1억8,300만원 지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環境部次官 鄭東洙** 예, 맞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이 대기보전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네요, 그렇지요?

○**環境部次官 鄭東洙**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이게 과기부 허가단체지요?

○**環境部次官 鄭東洙** 예, 맞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하지요?

○**環境部次官 鄭東洙** 물론 과학기술부 등록단체입니다마는 대기보존세계대회이기 때문에 환경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국으로서 저희들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고 이렇게 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대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대외수출기반 확보도 가능하고 또 환경벤처산업 육성 이런 기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 등록단체의 사업이지만 내용 면으로 보아서는 환경산업 육성 그 다음에 환경의 질 제고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전체 한 10억원 들어갑니다. 9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각자 등록비를 내고 또 그 전시회를 하게 되면 수익금들이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보충을 하게 되면 7억9,000만원 정도 한 80%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0% 모자라는 부분만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金文洙委員** 그러면 그것을 과기부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環境部次官 鄭東洙** 그러나 등록단체가 과기부 소속이라고 해도 내용 면에서 환경부 관련사업이면 저희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하남국제환경박람회 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게 지원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럴 때 환경부가 어떤 통제수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기관 같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환경부는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環境部次官 鄭東洙** 이것은 저희들이 등록단체를 환경부에 안 두었더라도 일종의 이것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해서……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저번에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할 때도 사단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단법인 허가해 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환경부가 곤경에 처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

씀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편의적인 방식으로 편리한 대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원칙을 세워서 해 나갈 때 나라의 질서가 안 잡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대기환경학회가 훌륭한 활동을 함으로써 또 우리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環境部次官 鄭東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단법인 대기환경학회를 허가해 준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과학기술부가 또 이런 환경부의 과학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구태여 이렇게 한 이유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 예산으로 주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삭감하는 데 대해서 부동의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部次官 鄭東洙 예, 따로 해명을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환경부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29일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李柱榮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법사위원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해오신 全在姬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 또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한나라당 소속의 吳世勳 위원을 같은 당의 金晟祚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의된 예산안을 소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일 일찍 시작해서 계수조정하는 소위원회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잠시 여야간사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 3분간 조율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李浩雄 위원님과 鄭宇澤 위원님 그리고 金武星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명확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질의·답변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出席委員(13人)

金樂冀	金文洙	金武星	金晟祚
朴仁相	朴赫圭	申溪輪	吳世勳
劉容泰	李浩雄	全在姬	鄭宇澤
韓明淑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姜長錫
전문위원	李昌熙

○政府側參席者

환경부

장관	金明子
차관	鄭東洙
기획관리실장	沈在坤
환경정책국장	郭決鎬
자연보전국장	全炳成
대기보전국장	朴大文
수질보전국장	李圭用
상하수도국장	南宮垠
폐기물자원국장	高在永

○其他參席者

국립환경연구원	
원장	崔德一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吳亨根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黃弘錫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金世鈺

【報告事項】

○議案回附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법률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

(10월24일 김형오·정문화·김무성·엄호성·도정이·남경필·정재문·김진재·박관용·하순봉·허태열·안경률·권태망·정형근·안상수·이창복·김학송·이근진·정의화·손태인·이상희·유흥수·정대철·조웅규·김영춘 의원 발의)

10월25일자 회부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1월7일 정부제출)

11월8일자 회부됨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6건 11월20일 정부제출)

이상 6건 11월22일자 회부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1월21일 정부제출)

11월22일자 회부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

(11월23일 정부제출)

11월24일자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박병윤 의원 대표발의)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박병윤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11월24일 박병윤·천정배·문희상·김충조·김윤식·김영환·강운태·윤철상·김성순·곽치영·심재철·이주영·김만제·김택기·이병석·강성구·배기운·남궁석·이희구·정장선·홍재형·김덕배·정범구·조성준·김운용·임태희·장영신·김부겸·허운나·전재희·박혁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25일자 회부됨

○**意見提示**

경의선철도및도로복원과관련하여비무장지대생태계파괴최소화방안강구를촉구하는건의안

(11월15일 김홍신·김문수·김원웅 의원외 18인 발의)

11월16일,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받음.

공기소음피해방지에관한청원

(11월21일 김용서제출)

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국방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받음.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11월23일 정부제출)

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받음.

○**請願回附**

비정규노동자의권리보장을위한관계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0년10월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5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로부터 金文洙·申溪輪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20일자 회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에관한청원

(2000년11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5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로부터 韓明淑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1일자 회부됨

근로기준법등개정에관한청원

(2000년10월2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803호 김금수, 김중배, 단병호 외 7인으로부터 金文洙·申溪輪 의원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10월26일자 회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에관한청원

(2000년11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남순으로부터 朴仁相 의원외 4인의 소개로 제출)

11월17일자 회부됨

고용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2000년11월2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김중배로부터 韓明淑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3일자 회부됨